南北 對話와 對蘇 接近 方案

1973. 6.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用役에 관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年 6月 日

研究機關：韓國外國語大學 極東問題研究所

研究委員：金 鶴 秀 , 金 在 九

目　　次

序　說 ………………………………………………………………… 3

I. 아시아国家로서의 蘇聯 ………………………………………… 5

1. 初期 蘇聯의 対亜政策 (対中共政策을 中心으로) ……… 9

가. 帝国러시아의 東占政策 ……………………………………… 9

나. 소비에트 政権의 成立과 対亜赤化戦略의 形成 …………… 10

(1) 〃10月革命〃과 中国의 反応 ……………………………… 11

(2) 〃10月革命〃에 対한 中国의 報道 ………………………… 12

(3) 1917年 革命以後 蘇聯의 対中国政策 ……………………… 13

(4) 第1次 카라한宣言 ………………………………………… 15

(5) 第2次 카라한宣言 ………………………………………… 18

(6) 結　論 ……………………………………………………… 20

2. 中期 蘇聯의 対韓半島政策 …………………………………… 21

가. 戦中政策 ……………………………………………………… 21

나. 戦後政策 ……………………………………………………… 25

II. 多極化時代와 強大国政策 ……………………………………… 33

1. 国際政治와 強大国 ……………………………………………… 37

가. 国際政治의 새 傾向 …………………………………………… 38

나. 列強政治 理論의 再抬頭 ……………………………………… 43

2. 아시아의 可能性과 強大国政策의 패턴 ……………………… 49

가. 脫 이데올로기 ………………………………………………… 58

나. 平和共存 - 全面戦争의 回避 ………………………………… 58

다. 내셔날 프레센스의 誇示 ……………………………………… 59

Ⅲ. 韓国의 対蘇 平和外交方案 …… 61
1. 蘇聯의 対外政策 理論과 可能性 …… 64
가. 아시아集団安保構想 …… 64
나. 第3勢力의 承認 …… 70
2. 蘇聯의 対韓関心度 測定 …… 72
3. 韓国의 対蘇 認識 …… 76
가. 接近의 패턴 …… 76
4. 対蘇接近의 패턴 …… 78
패턴 (가) 東西関係改善 …… 78
패턴 (나) 原則의 宣言 - 商業的 中立主義 …… 81
패턴 (다) 時期와 方法 …… 84
패턴 (라) 手段의 選択 …… 85

序　　　　　說

本稿의 목적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대의 전개

(1) 닉슨·독트린에 의한 아시아·太平洋 冷戰構造의 変革的衝激

(2) 이로 인한 아시아力学関係의 眞空을 予見한 소련의 集団安保構想(브레즈네프·독트린)의 抬頭

(3) 美国과 中共関係의 발전적 再編成

(4) 日本의 独自路線을 상징하는 中共과의 관계 正常化

(5) 美·中共間의 政治的 接近에 対備한 소련의 対日接近 摸索

(6) 東·西冷戰構造에서의 최후의 전쟁으로 評価되는 越南戰争의 終熄

등의 사태에 직면한 韓半島問題의 將來를 유리하게 결정 지을 수 있는 요인의 하나로 한국의 対蘇接近 方案을 科学的인 調査方法에 따라 羅列해 보는데 있다.

그러나 国家関係의 발전은 相互利益의 共通基盤을 許容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韓国과 蘇聯의 国家的 利益의 共通基盤은 어떤 것인가?

韓国의 対蘇接近 実益은 무엇이며, 소련의 対韓政策의 原形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우선 대답을 마련해야 된다.

그 위에 対蘇接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합리적으로 組立하는 것이 科学的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本 報告書의 조사방법도 이상과 같은 客觀的 상황을 체계화 하는데 역점을 주게 될 것인 바 前半部는 소련의 <아시아目的>과 아시아政治戰略의 質量을 정직하게 実測해 보는 부분이고 後半部가

韓国의 対蘇接近方略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留意해야 할 것은 드브르제가 말했드시 정치는 현실이며 완전한 客觀化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事理와 이른바 孫子가 말한 <兵은 나라의 大事요, 死生이 달려있는 存亡의 중대한 일>이란 警句에 관한 吟味이다.

国家戦略 — 国家와 民族의 운명이 걸려있는 — 問題가 한 조각의 이데올로기적 局面에서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이는 歷史上 不世出의 叡智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理論 以前의 大前提를 의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Ⅰ. 아시아國家로서의 蘇聯

I. 아시아国家로서의 소련

미국이 태평양국가란 이름으로 아시아問題에 介入하는데 대한 蘇聯의 対称은 아시아国家라는 것이다.

領土的 概念에서는 광대한 시베리아가 아시아北部를 压迫하고 있고 軍事的으로는 우리티보크의 極東艦隊가 東海를 牽制하고 있다.

소련의 石油工業과 鉱物資源의 厖大한 分布図를 시베리아가 갖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蘇聯으로서는 최초의 南進政策이 성공한 곳도 또한 시베리아 南部였다.

아이러니컬 하지만, 만일 中国에 共産主義革命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滿洲地方에 대한 소련의 南下政策은 確固하게 推進되었을 것이고 아울러 韓半島에 대한 年来의 宿願 — 不凍港獲得 — 은 8.15 解放과 더불어 이루어 졌을지도 모른다.

大連과 旅順港의 獲得은 中国大陸의 共産化로 永久性을 喪失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이다.

물론 一時的인 戰術的 次元에서 蘇聯政府가 国府政權에 대해 帝政러시아代의 領土的 <過誤>를 是正하겠다는 約束(카라한宣言)도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中国에 대한 帝国主義 列強들의 貪欲을 견제하여 소련의 中国赤化를 유리하게 誘導하려는 政略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는 中共革命後, 中·蘇国境紛争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련의 確固한 領土意志에서도 읽을 수 있는 터이다.

이와 같이 소련의 아시아에 대한 政治戰略은 다양한 국면을 내포하고 있다.

더우기 太平洋勢力의 主役인 미국과 日本이 中共에 대해 경쟁적 입장에서 아시아 전체문제를 결부시켜 解讀하려는 시기에 즈음하여 소련의 対亜戰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주는 것이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한국정부가 東西緊張構造에서 스스로 탈피하여 새로운 時代에 積極的으로 적응하려는 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아시아적 状況을 인식하면서 소련의 전략·전술적 입장에 관해 伝統的 構造로 부터 출발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 初期소련의 對亞政策 (對中國政策을中心으로)

가 · 帝政러시아의 東漸政策

帝政러시아의 우랄以東에 領土的 關心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578年 카작크의 예르마크 (Yermak) 酋長을 사주하여 지금의 토볼스크 (Tobolsk) 를 점령케 한 후 1582年 이반4世가 領土로 獻上받은 것이 그 端緖가 된다고 한다 (註 1)

이 보다 앞서 이반4世는 1567年 페트로프 (Petroff) 와 야리세프 (Yallysheff) 두 사람을 淸朝 (北京) 에 파견하였으나 貢物을 지참치 않았다는 이유로 皇帝拜謁을 거절당하고 돌아간바 되었다.

1619年 (토볼스크 점령후) 다시 에바시코 페트린 (Evashko Pettlin) 이 파견 되었으나 같은 이유로 되돌아 왔다 (註 2)

이후 넬친스크条約 (1689) (註 3) 을 거쳐 러시아의 太平洋進出이 보장된 아이친条約 (註 4) 을 체결하면서 不凍港 우라티브크港을 開設 (1860) 할 수 있게 되었다.

넬친스크条約이 中国側의 武力的 背景밑에서 성립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아이친条約은 러시아의 脅迫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것은 南進政策에 대한 러시아의 집념이 더욱 強固해 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帝政러시아와 中国 (清) 이 체결한 아이친条約까지의 러시아의 対亜政策의 中心은 領土的 関心에 限定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大帝国 中国이 병든 아시아的 生産様式에서 탈피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世界列強의 帝国主義的 侵略앞에 지극히 무력한 존재임이 들어나자 소련의 政策中心은 満洲経略을 거쳐 전

통적인 不凍港獲得을 위한 <南進政策>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마치 구주에서의 地中海南進政策을 옮겨 놓은듯한 감이었다.
이러한 帝国主義的 領土拡張과 러시아의 伝統的<不凍港>獲得을 위한 南下政策은 中国清朝와의 무수한 不平等条約에서 그 絶頂을 이루었다. 清日戦争(1894)에서 清国이 敗北하자 러시아의 南進野欲은 満洲에서 韓半島를 발판으로 한 新興 日本資本主義 勢力과 맞부딪치게 되었다. 이 日露戦争(1904)의 政治的 교훈은 韓半島에서의 大陸勢(소련·中国)와 大洋勢(日本, 其他)의 地政学的 支配의 限界性을 立証해 주는데 있다.

나. 소비에트政権의 成立과 対亜赤化戦略의 형성

1917年 소위 <10月社会主義革命>이 소련에서 이루어지고 레닌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教祖로서 君臨하게 되자 그들의 対外政策도 당연히 転換点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소비에트政権은 비록 革命에는 성공하였으나 内実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반 위에 서 있었다. 이데올로기로 전투화되고 理論으로 무장된 노동자 세력을 中心한 공산주의 革命이 아니라 少数兵士구룹과 反政府集団의 同調를 얻어 하루 아침에 中央政権을 탈취, 地方으로 조직을 波及하는 途上에 있었다. 따라서 反볼쉐비키적 세력은 방대한 것이어서 帝政러시아가 유지하였던 領土問題 처리 능력은 거의 갖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西方強大国들에 의한 간섭(神聖同盟)은 소련革命에 대한 중대한 위기였다. 또 満洲와 동부 시베리아에 강력한 拠点을 형성하고 있는 白系러시아의 軍勢는 자못 강성한 것이었다. 이들 白系러시아軍資金의 捻出은 주로 満洲 철도에서였다고 한다.

이와같은 状況에서 소비에트政権이 취할 수 있는 対外戦略은 명백한 것이었다. 그것은 구주와 극동에서의 그들 権益을 최대로 양보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아시아에 나타난 것이 이른바 중국에 대한 不平等条約의 폐기선언이었다. 이 선언의 효과는 만주에서의 白系 러시아의 反政府拠点을 약화시켰고 中国人의 自覚方向을 <10月革命>路線으로 誘入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이는 소련의 対亜赤化戦略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최초의 우회적 輸出이었다.

(1) <10月革命>과 中国의 反応

먼저 카라한宣言이 있기전 中国의 소련革命에 대한 반응을 갈라 볼 필요가 있다.

<10月革命>後 소련에 대한 中国의 최초의 호소는 1918年6日頃 孫文이 레닌에게 보낸 電文이었다.

당시 孫文은 大元帥職을 辞任하고 集団指導制로서의 7人総裁中의 한 사람으로 格下되어 広東政府의 最高指導者의 지위를 상실한 뒤여서 극도의 失意에 빠져 있을 때라고 한다(註5)

그 電文全文은 남은 것이 없으나 그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中国의 革命党은 貴国革命党員의 非常한 敢闘精神에 대하여 절대적인 敬意를 표하며 中·蘇両国의 革命党이 一致団結하여 共同으로 투쟁할 것을 希望합니다>(註6)

이 電文은 많은 迂餘曲節을 겪어 美国에 居住하고 있는 華僑를 통해 소비에트政府에 전달되었다(註7)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당시 소비에트 政権의 反革命勢力과의 투쟁

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中国의 新興革命勢力으로부터의 <10月革命>에 대한 讃揚은 레닌에게 있어 커다란 激励가 되었음은 있음직한 일이다.

소비에트政府는 孫文으로부터 받은 祝電에 대해 1918年8月1日付로 外務人民委員 치체린(G・V Chicherin)의 名義로 帝国主義에 대한 共同闘争을 孫文에게 호소했다(註8)

孫文은 치체린으로부터 同 電文을 전달 받지는 못했지만(註9) 孫文을 中国革命의 指導者로 높이 評価하고 共同闘争을 호소한점, 또 孫文이 지도하는 中国革命進動에 관해 깊은 共感과 커다란 期待에 차 있는 내용은 훗날 소비에트와 孫文과의 연계를 밀접하게 만든 端緖가 되었다.

(2) <10月革命>에 대한 中国의 報道

소비에트革命이 최초로 中国에 報道된 것은 革命3日後의 11月10日이었다. 당시 孫文의 <中華革命党>機関紙였던 <民国日報>에서 였다.

<페트로그라드守備軍 및 노동자 계급은 케렌스키 政府를 타도했다.>

1918年1月1日字 <民国日報>의 社説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을 본다.

<러시아革命이 要求하는 것은 무엇 인가? 그것은 人権이며 民権이다.

人権은 쟁취하기 위해서는 農民, 노동자의 生活을 改善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民権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專制王室과 貴

族을 排除하여 民主政治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나라 革命이 요구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다.

이른바 三民主義를 기초로 하여 민주국가를 건설하며 국내의 각 민족 각 계급을 모두 平等하게 하며 個人의 法律上의 人格을 존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人格 및 民權의 伸張을 이룩하는 것이며 平等自由의 精神을 실현시키는데 있으며 우리나라의 永久한 平和를 건설하는 ' 있다 >(註10)

말하자면 소비에트의 이른바 <社会主義革命>에 대한 中国知識層의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共産主義理論에 관한 지식은 매우 素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소련의 共産主義革命이 中国(孫文)의 三民主義理念과 같은 軌를 갖는다고 보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革命的 이데올로기를 三民主義의 理念的 立場에서 해석하려 하였음을 본다. 이러한 中国의 태도는 소련 볼쉐비키와의 理念的 共存을 가능케 하였을 뿐 아니라 中国에 共産党이 창당(1921)되고 그 活動이 활발해 지면서 国民党을 主敵階級으로 몰아 抗争하는 기간에서도 소련은 장개석(蔣介石)에 보다 밀착하여 中国問題를 처리하게 하였다.

(3) 1917革命後의 소련의 対中国政策

소비에트政府는 <10月革命>直後 1917年1月8日에 行한 소위 <平和宣言>에서 이미 帝政러시아가 체결한 일체의 秘密条約을 <完全하게 즉시 이를 폐기한다>(註11)는 要旨의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소비에트政府가 中国과 소련 관계에 관하여 최초로 상세히 논급된 것은 1818年7月4日 치체린이 第5回 소비에트大会에서 행한

소비에트。러시아의 外交政策에 관한 보고에서 였다.

〈우리들은 만주에 있어서의 짜르政府가 行한 征服을 포기하며 우리들은 主要한 貿易上의 動脈인 中東鉄道가 가로지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中国의 主権을 回復한다. 만일 소련人民이 이 鉄道建設에 投資한 資金의 1部를 中国側이 지불하게 된다면 中国은 강제로 中国에 부과된 協定속에 規定된 기한을 기다리지 않드래도 이 鉄道를 되돌려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中国으로부터 모든 領事館守備隊를 철수한다.

우리들은 中国, 몽고 및 페르샤에 있는 우리 소비에트市民의 모든 土地 所有権을 포기하는 것에 同意한다.

우리들은 모든 賠償金을 포기할 用意가 있다.……… 우리들은 이들 몇백만이란 사람들의 돈이 国民多数의 文化的 発展을 위해. 또는 東方의 民主主義를 러시아에 접근시키는데 사용되기를 希望하고 있다.

……우리들은 계속하여 中国의 同意를 얻을 수 있다면 中東鉄道 一部에 대한 특권을 포기하며 이 鉄道의 南部의 支線을 日本에 売却할 용의가 있다〉(註 12)

여기서 賠償問題는 中国의 義和団事件의 賠償金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만주에서의 中東鉄道는 白系러시아 反政府軍의 軍資金源이었는바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中国에 대한 〈革命的 善心〉인 同時에 白系러시아軍에 대한 고갈作戦이었다. 또 이들 白系러시아人의 거점인 만주 페르샤에 대한 土地所有権의 포기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생한다. 즉 白系러시아 거점 抹消와 이들 주변 세력의 対蘇感情의 완화를 통해 소비에트 革命政府에 대한 우호적인 접근을

획책한 奸巧한 対外戰略的 결합에서 발생하는 二重効果이다.

그러나 당시 中国側 사정으로는 소련의 이같은 제의를 정치 적으로 완전하게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따라서 소련의 제의에 대해 明白한 회답이 있을 수 없었다. 이로부터 약 1年後인 1919年7月26日 당시 極東에서 暗躍하고 있던 소비에트 共産党員 비렌스키(Vladimir Vilensky)는 이즈베스챠 紙上에서 소련의 中国政策을 말하는 가운데 中東鉄道問題를 언급하여 <소비에트側에 依한 中東鉄道의 移譲>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언제나 완전히 꼬리를 자른 革命的 포기제의가 아니고 …… 南部의 一支線을 日本側에 매각용의>등 정치적인 余白을 가진 전술적 선언에 시종한 것이었다.

(4) 第1次 카라한 宣言

1919年7月25日 소비에트外務人民委員 카라한(Leo Karakhan)은 <中国人民 및 中国의 南北両政府에 대한 声明> 이른바 第1次 카라한宣言을 発表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비에트軍이 外国의 武力 및 外国의 財力에 의하여 원조를 받은 反革命 專制主義者 골챠크軍隊를 打破하고 승리를 거두고 시베리아로 進入 드디어 시베리아의 革命的 人民과 合流하기에 이르렀다. 比際에 外務人民委員部는 中国의 全体 人民에 대해 다음과 같은 同胞로서의 말씀을 전한다.

2年間에 걸친 闘争과 믿기 어려운 노력 끝에 소비에트 러시아와 소비에트赤軍은 우랄山脈을 넘어 東方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 이는 圧迫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奴隷化하며 征服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시베리아의 모든 農民과 모든 노동자들

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들은 이들 人民을 東方의 노예화된 人民 및 中国人民을 질식시키고 있는 外国 무력의 속박 그리고 外国 財力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한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勤務階級 뿐 아니라 中国人民에 대해서도 원조를 할려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들이 1917年의 위대한 10月革命以来 줄곧 들어온바 있으나 미국, 유럽 및 日本의 매수 당한 신문들 때문에 감추어진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想起시키고자 한다.

労農政府는 1917年10月 権力을 잡은 후 즉시 세계 모든 인민에 대하여 소비에트 인민의 이름으로 確固하고도 永続的인 平和를 樹立하자는 제안을 통해 호소한바 있다. 이와 같은 平和樹立을 위한 기초되는 原則으로서는 여하한 外国領土의 獲得도 포기할것. 여하한 外国国民의 協道에 의한 併合 및 여하한 賠償도 포기하는 것이다.

노농정부는 日本, 中国 및 旧連合国과 체결한 일체의 秘密条約의 무효를 宣言하였다…………> (註 13)

第1次 카라한 宣言에서 노련은 中東鉄道와 2기에 부수되는 諸権利를 中国側에 무상으로 환부한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사실 당시 소비에트政権은 中東鉄道의 利権을 日本이나 英国等 제국주의 세력의 만주 침략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할 수 없었던 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의 태도는 5·4運動以来 中国의 民族運動 高揚期에서 보면 커다란 衝激과 鼓舞가 되었음은 말할것도 없다.

<소비에트政府는 中東鉄道 및 帝制 러시아治下에서 케렌츠기政府

밑에서 또는 盜賊홀바트, 세묘노프, 콜차크 밑에서 러시아의 將軍, 商人, 資本家가 빼앗은 일체의 鉱山, 森林, 金鉱 및 기타의 利権에 대하여 여하한 代價을 구하지 않고 中国人民에게 반환 한다> (註 14)

이 일절은 약 1年 2個月 後의 1920年 9月 27日 소비에트 政府가 外務人民委員 카라한 名義로 발표한 第2次 카라한宣言 (註15) 에서 실린 내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第2次 카라한宣言에서는 中東鉄道의 무상반환 부분이 修正되어 있어서 뒷날 中•蘇両国의 国境問題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요컨데 帝政러시아時代의 領土的 野望은 不断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레닌의 中国情勢觀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革命的인것 처럼 소련의 提議가 着色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第2次 카라한선언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시베리아의 정세가 레닌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판독되었을 때 였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기술하는 사가들이, <……소비에트의 対中国政策은 本質的으로 보아 欺瞞的 性格을 갖는 것이었다> (註 16) 는 주장에 기본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 소련은 정책수정은 당시 중국정세로 보아 第1次 선언대로 소련이 이행하는 경우 中東鉄道는 反動軍備(北方政府指称一註筆者)의 手中에 빠질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註 17) 說도 있다. 하지만 後에 中共이 中国을 赤化했을때까지도 国境問題와 滿洲利権問題로 오랫동안 부당한 교섭기간을 가졌던 소련측 태도로 보아 근거 박약한 주장이라 하겠다.

(5) 第2次 카라한宣言

1920年9月27日 발표된 第2次 카라한宣言은 第1次 카라한宣言에서 規定된 중요한 내용 한 귀절을 깔아뭉개고 있다. 第1次 宣言에서 약속한 中東鉄道 무상반환 귀절이 다음과 같은 깐깐한 표현으로 둔갑됐다.

<소비에트政府와 中国政府는 러시아 社会主義連邦共和国의 필요 때문에 中東鉄道利用의 규칙으로서 특별조약을 체결할 것에 同意하는 바이다. 上記条約 체결에 당해서는 極東共和国도 참가시킨다> (註 18)

그런데 제1차선언 가운데 中東鉄道의 무상반환을 제의한 귀절에 관해 주목할 점이 있다.

1919年8月 26日字 이즈베스챠 및 프라우다에 게재된 카라한 선언에는 그러한 1節이 脱落되어 있다고 한다 (註 19) 하지만 同電文을 打電하여 中国에 전달한 내용(仏文)은 問題의 귀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註 20) 이를 두고 다수의 학자들은 소련이 실질적인 입장에서 소련革命과 中国革命을 결합하여 공동투쟁을 벌릴려고 했다기 보다는 국제적인 선동·선전의 도구로 더 많이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当事者 카라한은 1923年11月30日字의 北京政府 中·蘇교섭督辦 王正廷에 대한 書簡에서 第1次카라한宣言에 포함되어 있는 中東鉄道 무상반환에 관한 1節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고 한다.

<中東鉄道問題에 관한 귀하의 書簡 内容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 문제에 관한 우리들의 의견 不一致에 관련한 귀하의 설명

은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重大한 오해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 誤解는 우리가 말한 내용 가운데 数個処를 誤訳한 翻訳者들 탓으로 돌릴 수 밖에 없읍니다.

나는 한번도 또한 어떠한 장소에서도 中東鉄道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中国에 귀속한다고 말한적이 없읍니다.> (註 21)

여하튼 中東鉄道問題는 1924年5月31日 北京政府와 소련 사이에 조인된 <中•蘇懸案解決을 위한 大綱에 관한 協定> (註 22) 이 있은 후 両国 国交는 정식으로 樹立되었다.

이 협정에서 中東鉄道에 관한 規定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낙착되어 있다.

<……소비에트政府는 中国政府가 中国資本을 가지고 中東鉄道 및 이에 부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사들이는 것을 인정한다> (註23)

다소 장황한 느낌이지만 본항에서 필자가 시도한 것은 中東鉄道問題의 역사적 처리 과정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帝政러시아에서 소비에트時代로 이행한 初期 소련의 対亜政策의 本質的 構成을 살펴 보는데 있는 것이다. 소위 社会主義政権의 国際主義的 外交原則에 기초를 둔다면 中東鉄道의 中国귀속은 당연한 것임은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소련정권은 (1) 국가이익, (2) 국제적 제조건의 力量関係를 동시에 유리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은 소련 外交의 기반을 이해하는데 결정적 열쇄가 된다. 즉 자국의 이해와 국제적 역학관계가 자국에 유리한 경우 이데올로기적 제 원칙은 뒤로 제쳐진다는 것이다.

(6) 結　論

소련의 外交政策 根幹은 国際主義原則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 조각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국가 이익의 손상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하나 주변정세 — 국제적 조건에 있어서 중대한 파국에 직면했을 경우 어떠한 형식적인 양보도 가능한 반면 제 조건이 유리해졌을 경우 소련의 대외적 약속은 변증법적 둔갑을 서슴치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 점은 앞으로 전개될 소련의 아시아 — 한국정책 분석에도 예비지식으로 동원되어야 할 참고사항이라 하겠다.

2. 中期소련의 對韓半島政策

소비에트政府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집념은 여러차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한번도 실효있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旧韓末時代 韓半島에 집결한 제국주의 세력 다툼속에 끼어들었으나 日本의 반대로 軍事的인 후퇴로 좌절되었고 戰後 소련軍의 진주로 그 판도 안에 赤色傀儡政府를 내세우는데 까지는 일단 성공적이었으나 美国의 반대로 다시금 한반도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은 감소되고 말았다. 물론 中共의 成長에도 一要因은 있는 것이지만 北方大陸勢와 南方大陸勢의 地政学的 마찰이 韓半島의 절대적 偏向을 용납하지 않은 탓도 있다. 이점을 감안하고 세계제2차대전을 통하여 소련政府가 내세운 対韓半島 공식 입장을 검토해 갈려고 한다.

가. 戦中政策 - 얄타協定

서구에서 전쟁이 한창이던 때, 소련은 아시아戦争에 대하여 中立的 立場을 내세우고 있었다.

1941年4月13日 체결된 日•蘇不可侵条約이 겨냥하는 바는 日本으로 하여금 소비에트 国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地域에서 전쟁에 허덕이도록 하는것은 소련쪽에서 볼때 바람직한 일이라는데 맞춘 것이다.

또 소련 쪽에서 볼때 아직 社会主義建設에 손도 대지 못한채, 独逸軍의 侵略을 받고 있는터에 極東에서 日本軍과 전쟁에 들어간다

는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이다. 이 점은 소련의 極東参戦을 열망하고 있던 미국의 입장과는 상반된 처지였다.

당시 美国務長官 코델 헐 (Cordell Hull) 은, 1941年12月8日 駐美大使로 任命된 리트비노브 (Litvinov) 와 最初의 会見을 갖고 소비에트의 太平洋 沿岸에 미국의 基地建設問題를 打診하였다. 12月 11日 리트비노브와 다시 만났을 때, 소비에트政府는 현재로서는 日本에 대해 連合国과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는 취지를 전달받았다고 한다.(註 24)

그후 1942年8月 처칠과 함께 모스크바에 간 해리만은 다시 이 문제를 스타린에 제기했다. 그때 스타린은 日本은 소련의 숙적이며 日本의 결정적 敗北는 소비에트에 의해 이루어짐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하므로써 결국에는 소련이 対日戦에 참가하리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한다.(註25)

이와 같은 소련의 입장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와 정치적 조건에 대한 보장마저 얻는데 성공하였다. 소련의 極東参戦問題는 얄타에서 열린 루즈벨트와 스타린의 회담 (이 회담에 처칠은 除外되었음) 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1945年2月11日 3巨頭 (루즈벨트, 처칠, 스타린) 가 서명한 소련의 対日参戦에 관한 비밀협정 얄타協定내용을 보면 戦後 소련의 아시아 極東政策의 청사진을 볼 수 있다.

얄 타 協 定

1945年2月11日

소련, 미국, 영국 3国의 지도자는 독일이 항복하고 또한 欧洲戦

線이 종결한 후 2月 또는 3月以内에 소련이 다음 条件에 의하여 연합국에 참가하여 対日戦에 참가한 것을 협정하였다.

1. 外蒙古(蒙古人民共和国)의 현상을 유지한다.

2. 1904年의 日本의 背信的 攻撃에 의하여 침해된 소련의 諸權利를 다음과 같이 回収한다.

(a) 華太南部 및 이에 인접하는 一切島嶼를 소련에 반환한다.

(b) 大連商港을 국제화하고 同港에 대한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소련 海軍基地로서 旅順港의 租借権을 회복한다.

(c) 東清鉄道 및 大連에 出口를 두는 南満州鉄道는 中・蘇合辦会社의 설립에 의하여 共同運営한다. 但,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中国이 만주에 있어서의 완전한 主権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3. 千島列島를 소련에 인도한다.

前記의 外蒙古, 港湾 및 철도에 관한 협정은 蔣介石総統의 同意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미국 대통령은 스타린元帥로 부터의 권고에 의하여 右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3国政府 首脳는 소련의 右項 要求가 日本敗北後에 있어 확실히 실시되어야 함을 협정했다. 소련은 中国을 日本의 속박에서 해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군대에 의하여 중화민국에 원조를 주기 위하여 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連邦과 中華民国사이의 友好同盟条約을 중화민국 정부와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다.(註26)

이와 같은 엉성한 비밀협정이 이루어진 이면에는 루즈벨트의

極東事情에 대한 무지와 소련의 탐욕스런 정치적 요配合된 결과였다. 그리고 얄타協定이 실시되게 된 결과는 中国側의 交涉無能과 弱体化가 주된 원인이었기도 하다.

소련은 이미 1945年 얄타協定때부터 極東에 대한 赤化青写真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中美大陸에 대한 赤化基地로서 外蒙古의 存在를 보장받고, 日本에 대한 政治的 制圧手段으로서 <北方領土>에 대한 回収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는 뒷날 소련과 中国사이의 체결된 軍事同盟(1950)의 표적이 日本이었음을 보아도 짐작키 어려운 일이 아니다.

大連·旅順港에 대한 租借権 주장은 제1차, 제2차 카라한宣言의 정신을 본질적으로 외면한 제국주의적 요구이다. 이는 소련政府의 전통적인 <不凍港>南進政策의 의식적 所産이라 할 것이다. 만주의 요충, 大連과 旅順의 確保는 곧 韓半島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되는 것이며 이 압력은 소련의 北韓進駐와 더불어 곧 物質的 力量으로 転変될 수 있는 <基地>였던 것이다.

얄타会談에서는 한국문제가 그리 주의를 끌지 못했다. 미국은 韓国에 대하여 多数国家에 의한 信託統治를 구상한것(루즈벨트) 같고 소련도 이에 同意한 것으로 되어 있다.(註27)

그러나 스타린은 이미 그때부터 韓半島에 外軍駐留可能性에 관하여 루즈벨트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루즈벨트는 필요없다고 답변한 기록이 있다.(註28) 그러나 公式的인 文件으로 남아 있지 않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대한 군사점령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포츠담会談(1945. 7.22)이 열리고 한국에 대한 信託統治의 可能性이 논의되고 있을 무렵 7월 24일 일본에 대한 장래의 交戰

問題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가능성을 문의한바 미국의 답변은 日本 本土上陸後가 아니면 實行可能性이 없다는 것이었다.(註29) 따라서 韓半島는 소비에트軍에 할당된 作戰戰域에 전부 포함되고 말았다. 8月8日 포츠담宣言에 가맹할 것을 성명하고 카이로宣言을 확인했다. 소련政府는 다시 한국에 대한 4개국 信託統治原則과 한국은 최종적으로 독립된다는 견해를 確認했다.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軍事行動은 8月12日 元山에 上陸함으로써 시작되었다. 38線은 맥아더가 발표한 日本 항복에 관한 一般命令 第1号에 논거를 두고 있다. 어떤 政治的인 고려에서라기보다 순전한 군사적은 기초에서 마련된 것이 맥아더의 一般命令 第1号라고 한다. 美国政府의 비교적 底級레벨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냐는 설(註30)도 있지만 여하튼 전쟁이 끝나고 보니 38度線上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마주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당시의 설명을 빌면(註31) 미국政府가 맥아더 一般命令 第1号草案을 스타린에게 수교하였으나 만주에서의 日本軍의 저항이 이외로 강력하였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나. 戰後政策

世界第2次大戰後 소련軍이 한반도의 38선 이북에 진주하여 그들의 衛星政權을 세우고 한반도의 완전한 赤化를 달성하려던 시기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태발전에 관해서는 본고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다만 전후 한국문제 처리에 있어 소련의 의중이 가장 잘 나타난 모스크바 3相会議決定 내용을 검토함으로서 전후 소련

의 極東問題 처리상황과 극동정책에 있어서의 또하나의 패턴을 살피고저 한다.

소위 <朝鮮에 관한 모스크바 3相会議決定(모스크바協定 抄) 1945.12.27. 署名>에 나타난 골자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이 압축된다.

① 臨時朝鮮民主主義政府의 수립

② 임시정부 구성을 도울 目的으로 먼저 그 적당한 방법을 연구 조사하기 위해 남조선 미합중국 점령군과 북조선 소비에트 점령군의 대표자들로 共同委員会가 설치될 것이다. 그 제안作成에 있어 共同委員会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작성물은 共委代表가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美·英·蘇·中 各国政府에 참고용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③ 共委의 제안은 最高 4年期限으로 4個国 信託統治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美·英·蘇·中 諸国政府가 共同参酌할 수 있도록 조선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④ 2週以内에 조선 주둔 양군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註32)

당시 소련의 言論機関들은 일제히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모스크바 뉴스>(Moscow News)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는 主要聯合国에 의해 이룩된 聯合信託의 최초의 실제적인 실험으로 될 것이며, 만일 이것이 성공한다면 그리하여 그것이 만약 적절한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면 성공은 틀림없을 뿐 아니라 이 연합신탁통치안은 委任統治나 植民地 領土의 장래에

관한 많은 同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되게 될것이다>(註33)

또 이즈베스챠 記事도 이 信託統治는 소비에트와 미국의 한국에 관한 급속한 經濟復興과 政治上의 안정을 회복한다는 정책상의 협조 결과로 확신한다고 논평하였다.(註34)

모스크바 3相会議의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한국의 両司令部 代表들은 1946年1月16日 서울에서 共同委員会를 개최하였다. 73名의 대표가 그 전날 서울에 도착했다. 미국측은 임시정부 수립문제 보다 앞서 한국경제의 통일문제를 심의할 것을 희망했다. 그때문에 미국측은, 철도와 기타 통신기관 및 電力의 통일된 운용과 함께 은행업무, 通貨, 通商에 대한 통일있는 諸政策, 상품의 자유로운 流通과 両地域間에 特定人의 교류를 확립할것과 無防備状態로 방치되어 있는 38度線을 따라 双方이 支配可能한 地帯를 건설할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비에트側은 特定項目만을 즉 電力의 供給, 鉄道와 道路에 의한 両地域間의 交通再建같은 문제만을 심의할 것을 원했다. 시설을 연합하여 운영할것을 고려한것은 北朝鮮에서의 절대적인 소비에트의 지배를 침해하는 것임으로 拒否되었다. 미국측의 대표가 南韓은 전쟁중의 비료의 부족과 북한으로부터의 피난민 격증으로 인하여 쌀 供給에 난점을 지적하자 소련 代表는 이 회의의 의제로서의 通商交換의 문제를 除外했다. 3週間의 토의 결과 교통과 両司令部間의 연락에 관한 한정된 협정을 체결했으나, 그후 미국측이 이 한정된 협정일지라도 이행하려 몇번인가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 회의는 우편물과 小数의 軍事連絡班의 断続的인 交換으로 끝났을 뿐이다.(註35)

그러나 이 제한된 両側의 교류관계도 소련軍側의 一方的인 遮断으로 아주 잘려 버리고 말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38도선 이남에는 비록 政治的 混乱의 渦中에 있었으나 民族陣営勢力이 反託隊列로 묶여 단합되고 있었으며 강력한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적인 교류의 폭을 넓히던가 나아가 政治的 및 社会的 門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경우, 韓半島 赤化基地로서의 北韓의 존재는 사실상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전략적 力量関係가 확인된 이상 실속없는 共同委를 끌어나가느니 보다 北韓만의 基地化構築이 더 큰 의의를 갖는다고 소련占領軍当局은 판단한것 같다.

土着的 共産組織이 없는 北韓社会는 南韓이 갖는 社会的 不安보다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占領軍으로서의 소련軍은 北韓의 政治, 経済의 모든 大権을 틀어쥐고 傀儡政治集団으로 하여금 정권을 잡게 했음으로 상당한 내부모순이 존재했음이 명백하다.

5月8日 무기휴회를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美・蘇共委는 결렬되고 말았다. 会談中断의 理由를 보면

(1) 美国側이 協議対象의 諸南朝鮮団体 선정에서 주요한 민주적 分子를 제외했으며

(2) 한국에서의 経済的 統合問題 討議를 소비에트側이 거부한것은 이 문제가 조선 자신의 문제로서 仮政府가 수립되었을때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는 설명을 널어 놓고 있다.(註35)

政治的인 初步的 赤化工作段階인 同調勢力獲得(1)에서 실패하자 南韓에 대한 経済的 孤立을 시도(2)한 것이란 것이 소련의 真意일 것이다. 韓半島의 安全한 確保는 통일된 후에 오는 태평양 세력과의 마찰에서 오는 균형의 파괴에서가 아니라 영구적 분단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 사실을 간취한 소련이 美・蘇共委를 破局으로 몰아 한반도를 영구 분단케 하려던 소련의 戦後初期의 対

韓半島政策은 당연한 理論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1953년 한국전쟁이 유엔軍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局面으로 전환하자 소련은 分断可能線에서 다시금 休戰을 갖게 함으로써 韓半島의 休戰線 北方에 대한 安全을 도모한 점으로 보아 입증되는 터이다.

(註1) Weigh, K•S, Russo - Chinese Diplomacy, P•4
アジア歴史叢書，ロシアの東方政策 p.45.

(註2) 浅野利三郎，太平洋外交史，p.82.

(註3) 申基碩，東洋史，p. 19～21

(註4) John Bell，ロシアの東方政策，p. 69～70.

(註5) 李剣農，最近三十年中国政治史，p. 546.

(註6) <政治週報>第5期，p. 11,
彭明，中・蘇友誼史，北京人民出版社，1957. p. 57.

(註7) 同 上

(註8) Izvestia, March 9.1919, Quoted in <Soviet Documents on Foreign Policy, 1917 - 1924, Vol (London, 1951), p.92～93.

(註9) 孫文；치체린에 대한 1921.8.28字 書簡

(註10) 彭明，中・蘇 友誼史，北京人民出版史，1957，p.56.

(註11) Decree on Peace, Passed by the Second All-Russian Congress of Soviets of Workers', Soldiers', and Peasants' Deputies, Jane Degras, OP, Cit., p. 2.

(註12) Izvestia, No. 138 (402), July 5.1918, Quoted in allen S, Whiting, Soviet Policies in China, 19687, pp. 28～29.

(註13) Jane Degras, OP, Cit., pp. 158～159.

(註14) 前掲書 p. 159～160.

(註15) 前掲書 p. 212～215.

(註16) 王聿均，<中・蘇外交的序幕 從優林到越飛 >(台湾，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1963)，p. 68～69

(註17) 山本 登 編, 中ソ対立と アジア諸国 (上)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1969), p. 19.

(註18) Jane Degras , OP . Cit., pp. 215.

(註19) Allen S. Whiting, Sovit Policies in China , 1917~1924 (Stanford , 1968) , pp. 28~29.

(註20) Jane Degras , OP . eit., pp. 159~160.

(註21) The China Year Book , 1924~5 , p. 875

(註22) 요페 (Joffe) 의 교섭 (中東鉄道無償返還問題) 이 실패한후 카라한이 직접 北京에 파견되어 체결한 것임.

(註23) 協定第 9 条

(註24) Memoirs of Cordell Hull (London , Hodder & Stoughton , 1948)

(註25) John R. Deane , The Strange Alliance (New York Viking Press , 1947) , p. 226.

(註26) 東亜日報社安保統一問題調査研究会編,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 1971.

(註27) A・L・Grey, jun., <The 38th Parellel> , Foreign Affairs , April , 1951.

G・M. McCune , Korea Today , (London , Allen and Unwin for IPR , 1950) , p. 43.

(註28) Sherwood , White House Popers, ii 857

(註29) US House of Reperesentatives , Commitee on Loreign Affairs ,

(註30) Max Beloff. (石川忠雄, 小谷秀二郎 共訳) , ソヴイエトのアジア政策, 日本外政学会, 1957 , p. 254~255.

(註31) 同 上

(註32) 東亜日報社安保統一問題調査研究会編,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 1971. p. 22.

(註33) Manchester Guardian , 31. December 1945에서 引用.

(註34) Izvestia , 12. January 1946.

(註35) Izvestia , 15. May, 1946,Quoted in Beloff's, p. 265.

Ⅱ. 多極化時代와 强大國政策

Ⅱ. 多極化時代와 强大國政策

닉슨 美国大統領은 1970年 国会 教書의 対外政策報告에서 国際政治에 대한 美国의 役割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美国의 中心的인 役割없이는 世係의 平和와 進步는 不可能하다>(註1)

이와 같은 表現은 両極時代에서의 国際警察力量을 자처했던 때와는 퍽 거리가 먼것이라 하겠다.

또 그는 새時代의 의미를;

<国際関係에서의 戰後時期는 끝났다>고 규정하면서, <새時代는 모든 先進的 勢力의 중심이 되는 欧洲(특히 西欧)와 日本의 資源이 새로운 国際秩序를 樹立하는데 공동(美国과)으로 投与되어야 한다>(註2) 고, 주장했다.

이는 美国의 独舞台였던 <戰後時期> — 1960年代初半까지의 国際政治的 性格에 대한 再評価를 뜻하는 것이다.

즉 美国의 国際能力의 限界点을 스스로 認定한 것이며 더 이상의 <積極的인 조정>이나 <直接的이며 軍事的인 介入>政策을 부인한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 重要한것은 地球의 西半欧에서의 美国의 주요 同盟勢力으로는 西欧를 지적하고 東半欧에서는 日本을 美国의 同盟勢力으로 붙들어 매어 두려는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国際秩序의 多極化 趨勢를 인정하고 美国의 현실적 力量을 시인하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美国의 国際的인 役割을 積極的으로 내세우면서 그 同盟勢力의 범주를 明白하게 긋고 있다는 것은

비단 美国의 政策的 경향일 뿐 아니라 国際政治에서 強大国政策의 一般的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戦後両極体制에서 NATO와 버금가는 바르샤바를 앞세워 軍事的 対決勢를 형성, 西欧에 대한 政治的 입장을 構築하는데 必要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西欧의 経済的 自立은 곧 政治的 自主性으로 나타나 路線의 多様性이 인정됨에 따라 NATO-WARSAW간의 긴장도 比例的으로 완화되어 가기 시작했고 東欧의 政治的 自主路線이 활로를 찾기 시작했다.

따라서 東欧에 대한 소련의 통제도 그 절대성을 상실해 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소련도 비록 긴장완화 추세에 効果的인 적응도는 인정하면서도 이데올로기적인 종주권에 대한 <多中心>마저 시인한것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中共에 대한 철저한 <一中心的 教条性>을 強要함으로써 中·蘇 関係의 분열을 촉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国際政治의 問題는 強大国 政策이 現実的 適応度를 중시하면서도 基本的 国家 이익 추구에 또 다른 中心을 두는데서 発生한다는 前提를 成立시킬 수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両極体制의 核心支柱가 되는 美国과 소련의 묵시 또는 顕示的인 多中心의 인정은 国際 政治上 좋아하든 싫어하든 両極間의 平和共存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世界의 平和도 이러한 기반위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1. 國際政治와 強大國

70年代 国際政治의 特徵 가운데 하나는 軍事的으로는 美国과 소련의 両極性이 그대로 存在하는데도 不拘하고 政治的으로는 多極化가 広範하게 推進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政治的 多極化가 促進되면 될 수록 軍事的 両極性은 의미를 잃어 간다는데 70年代 国際政治의 性格的 展望을 可能케 한다. 더구나 政治的 多極化의 背景이 東西冷戰構造의 와해 美·蘇 両大国의 各各 自己陣営에 대한 支配統制力의 쇠퇴라는데 있다고 본다면 한층 뚜렷한 可能性을 発見할 수 있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해 現代 国際政治上의 問題는 現実的인 多極化 過程이 어떠한 行程을 거쳐 進行될 것이며 어떤 種類의 過渡期를 갖느냐는 問題와 強大国의 役割 또는 強大国의 政策傾向이 어떠한 性格을 띠게 될 것이냐는 設問에 대한 정당한 解答을 마련하는 일이다.

먼저 향후 国際政治의 흐름이 <多極化>란 制限된 概念속에 完全히 表現될 수 있는가 하는 問題이다.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多極化의 背景은 両極性 強大国이 第3者의 発言権 增大로 불러 支配가 劃一性을 잃은 結果로 나타난 現象이란다면 이를 다른 말로 表現해 国際勢力의 均衡이 이미 破壊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国際政治의 깨어진 배런스를 自己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再調整하려는 強大国의 執念이 있음직 하고 또 잠재 強大国에 의한 저항도 発生할만 하다. 破壊된 均衡에는 真空状態가 생기게 마련이고 이 真空状態는 곧 새로운 形態의 勢力에 의해 補塡되게 마련이다. 이 새로운 形態의 勢力이란 기존 強大国 — 기존 질서일 수도 있고 새로운 잠재 強大国에 의한

代替勢力일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戰争(大戰)으로 인한 경우에 흔히 조성되는 状態이다.

이데올로기의 완화 — 탈 이데올로기로 인해 発生한 긴장완화의 結果로서는 再調整된 強大国協商 — 이 경우 弱小国은 一方的 희생물이 된다 — 이나, 利害를 같이 하는 既存強大国과 新生強大国間에 再配置된 相続関係에 의한것이 前者의 状況이라 할 수 있다.

그 어느것이든 <自覚되지 않고 未開発된 資源을 가진> 国家 即 <南(가지지 못한 나라)>에 속한 弱小国家에겐 威脅的인 동기가 되는 것임은 분명하다.

가. 国際政治의 새 傾向

우선 多極化의 흐름부터 살펴 보자. 우리가 말하는 国際政治上의 多極化 過程이란 어떠한 경로를 밟아 이루어진 行程인가 (이 問題는 後述部分이 되는 対蘇接近 方案을 수리하는데 基礎資料가 된다)?

戰後 東西冷戰構造는 両極的 대립을 조성,国際的 긴장 状態를 조성해 왔다.

이와 같은 緊張에 性格的 変化를 招来한 주요 요인으로 핵무기의 発達을 첫째로 꼽고 있다. 冷戰의 극한적 위기는 核武器로 인해 <自制>라는 形態의 緩和를 주게 되었다. 冷戰時代의 極限的 状況이었던 1950年의 韓国戰争, 1962年의 쿠바危機 등은 核武器에 의한 全面戰争을 회피하려는 美国과 소련의 自制結果였던 것이다. 어쨌든 이것을 고비로 美•蘇両国은 서서히 対決로부터 対

話를 잇는 外交姿勢로 転換하여 소위 <恐怖의 均衡>을 이루었는 바 이것은 初期 <平和共存>의 形態였다.

이 당시의 特徵은 美国과 蘇聯의 한쪽으로는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의연히 抗争을 継続하는 両面性을 띠고 있었다는데 두고 있다.

쿠바危機를 契機로 하여 核実験部分停止, 核拡散防止 등 両条約을 거쳐 戦略核武器 削減交渉에 이은 協力関係의 展開가 보이는 반면 中東紛争이나 베트남戦争에 있어서는 의연히 対立이 継続되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時代的 엑센트는 여하튼 対立에서 보다 相互協力에 두고 있음은 明白하였다.

大勢는 平和共存이 定着하는 方向으로 進行되었던 것으로서 말하자면 人工的 信頼(Synthetic Trust)가 構築되었던 状態였다. 問題는 美・蘇의 信頼関係가 人工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不自然스러운 것이었고 日・美 또는 英・美처럼 自然的인 信頼関係가 없었다는데 있었다. 당시 美・蘇両国은 協力関係를 重視하면서도 諸各其 全力을 경주하여 戦略核軍備를 増強해 갔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美・蘇関係의 平和共存的 進展은 우발사고가 아니한 美国과 蘇聯間의 戦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国際通念을 낳으면서부터 自然히 緊張緩和의 무드가 拡散되기에 이르렀다.

緊張緩和는 欧洲에서부터 시작되었다. 冷戦이 시작된 곳도 구주였기 때문에 冷戦의 終末 또한 欧洲로부터 시작됨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西欧社会에서는 蘇聯이 침공해 올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와 똑같이 東欧側에서도 체코事態와 같은 突然変異는 있었지만 西欧 또는 美国側에 의해 戦争이 発生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데까지 東西의 緊張関係는 緩和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軍事情勢가 —— 美国과 蘇聯의 파워·배런스가 거의 안정되어 있다는 것 외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緊張緩和를 招来한 또 하나의 주요 요소는 즉 아메리칸 프레센스 였다. 제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는 蘇聯軍이 欧洲中原에 進出, 여세를 몰아 西欧조차 席捲해 버리려는 형세였다. 당시 西独은 황폐하였고 英仏은 피폐하여 余力이 없었고 이태리는 内乱前後의 様相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状況에서 蘇聯의 西欧支配를 沮止한 것은 투루맨·독트린·마샬 플랜(다같이 47年)의 延長으로서 결성된 北大西洋条約(1949)이었다. 30만의 美軍이 西独을 中心으로 주둔하였는데 이는 만일 蘇聯이 침입한다면 美国은 핵병기를 使用해서라도 西欧友邦을 방위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는 것이며 蘇聯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를 지닌다. 西欧 특히 西独쪽에서 본다면 在欧美軍은 이와 같은 결의의 증명이며, 다른 의미에서는 30만의 人質이기도 하다. 때문에 西独의 브란트 首相은 1970年 美国을 방문함에 즈음하여 닉슨大統領에 대해 在欧美軍의 빠른 減縮이 없도록 강력하게 호소했던 터였다. 아메리칸 프레센스가 있음으로서 欧洲의 緊張緩和는 促進되었고 따라서 브란트首相이 推進하는 東方政策도 有力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는 状況分析은 正当한것이었다 할 것이다.

어쨌던 아메리칸 프레센스에 의해 蘇聯에 대한 컨테인먼트는 성공하였으나 欧洲에서는 戦争이 없을 것이라는 判断이 東西유럽의 共通観念으로 된다면 軍事同盟에 대한 評価가 変化됨은 당연한 귀

결이다. 西欧側에서는 NATO를 無用之長物로 보기 시작하고 東欧側에서는 바르샤바同盟을 <맑은 날씨에 우산> 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東西다같이 軍事的 結束이 해이해지고 美·蘇의 国際政治的 意志는 充分히 존중되지 못한다. 이리하여 軍事 両極과 政治多極化의 情勢가 조성되는 것이다. 東西両同盟이 다같이 이른바 <岐路>에 서 있으나 닉슨大統領은 2月 19日의 通称 外交文書(1970年代의 美国의 外交政策)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70年代 美国과 欧洲関係를 再検討할 시기가 到来하였다. 새로운 사태에 効果的으로 適応하기 위해서는 NATO를 어떤 同盟으로 바꾸어 놓으면 좋을 것인가?> (註3)

이와 같은 設問끝에;

<西欧의 活力과 独立을 반영할 相互協力(Mutual Partenership)으로 進化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註4) 고 自答하고 있다.

닉슨 就任後의 最初의 外遊가 西欧友邦訪問이었음을 보아도 示唆되는바와 같이 美国政府는 현저한 低姿勢로 西欧諸国의 뜻에 迎合하려 努力하고 있다.

NATO가 결성된 4半世記前은 고사하고 덜레스 外交時代만 比較해도 今昔之感이 깊은바 있다.

이와 같은 美国의 低姿勢 外交가 시작된 동기가 EEC의 発展으로 西欧諸国이 번영과 자신을 回復한 結果로서 自然히 美国의 의존으로부터 탈출하여 급기야는 美国에 대한 発言権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国際情勢의 多極化 行程은 당초 経済的 自立이 政治的 쇼크를 주어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지막 行政은 政治的 多元化가 軍事的 両極性 対決度를 緩和시키는 것으로 移行한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을것 같다.

무엇 보다도 西欧의 자신을 誇示한것은 드골将軍이 었다. 独自的으로 核武器를 開発하여 NATO軍事機構로부터 離脱하고 EEC를 主導하여 美国과 蘇聯에 대항하는 第3勢力을 형성하려 기도한것은 <政治的 雄図>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 역시 欧洲의 緊張緩和気運에 편승한 구상이었던 것이다. 다시 이를 바꾸어 말하면 美国의 蘇聯에 대한 컨테인먼트政策이 一応 成功하였기 때문에 드골의 발상도 可能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技術的으로 보아 露骨的으로 美国을 — 아마도 故意로 — 排撃한 것은 자유진영 내에 무용한 마찰을 야기한 것으로서 未熟한 行為였다고 評価되어야 할것 같다.

美国의 諸大学에서 <外国政治家中에 가장 싫은 政治家는 누군가?>라는 앙케트를 설정한 일이 있는데 그 回答을 集計한 結果 毛沢東이 第1位, 드골이 第2位의 順序였다. 이 두사람이 95%를 차지하고 최저 1%가 브레즈네프였다고 한다.(註5)

多極化는 그것대로의 外交的 효능을 可能케 하나 드골과 같은 排他的 独走는 再考의 余地가 있다 할 것이다.

多極化의 발원지인 西欧極의 中心은 이제 프랑스의 영광으로부터 西独으로 移行하였다. 이것은 両国의 通貨実勢를 対比해 보아도 알만하다. 프랑스은 切下되었지만 마르크는 切上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西欧内部에 多極化를 促進하는 国際政治的 波及効果를 초래한다.

自由世界의 多極化는 필연적으로 非自由(共産世界)世界의 多極化를 낳는다. 일방은 타방을 자극하여 쌍방의 多極化를 促進하는

것이다. 단지 自由世界는 자유로운 多極化 現象이 可能하나, 非自由世界는 軍事的 両極性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蘇聯은 自国内에서 許容되고 있는 限度以上으로 東欧諸国에 自由를 용인하려 하지 않는다. 체코事態의 비극은 그 適例라 않을 수 없다. 美国이 닉슨·독트린을 제창하여 友邦의 自主性을 支援하는 外交的 形態를 取하여 多極化的 国際情勢에 効果的으로 適応하려 하는데 반해 蘇聯은 브레즈네프·독트린을 제창하여 衛星勢力에 대해 크레므린의 意思를 강제해 보려 한다. 그러나 東西를 불문하고 多極化 경향은 世界大勢로 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려함은 시계 바늘을 꺼꾸로 돌리려는 行為와 비슷한 것이다.

蘇聯은 欧洲에서 欧洲安全保障会議를 제안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아시아集団 安保構想>이란걸 내밀고 있는바 이는 欧洲의 緊張緩和를 얻어 아시아에서의 中共 및 太平洋勢力과 効果的으로 대결하기 위한 속셈인 것이다. 그러나 그 結果로서 대두될것은 欧洲 — 東欧의 多極化 現象을 促進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向後 国際情勢의 추이는 強大国이나 弱少国이나를 막론하고 多極化란 큰 흐름에 어떻게 効果的으로 自国政策을 適応시키는가 하는 問題가 国家政策 樹立에 中心的 과제로 될 것이다.

나. 列強政治理論의 再抬頭와 아시아

国際政治上 強大国이라 함은 他国에 대한 影響力의 大小를 측정하여 나온 相対的인 概念을 말한다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삼고자 하는것은 弱少国에 대한 強大国의 国際政治的 作用을 말한다. 비록 多極化 姿勢가 広範하게 世界에

확산되드라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強大国 이익에 동떨어진 곳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이 強大国의 이익이란 대개의 경우 弱少国의 이익과 相衝되는게 보통이다.

본항에서 말하는 弱少国이란 強大国에 대한 단순한 상대적인 意味에서가 아니라 現代政治의 中心問題가 되는 南北状況에서 南(가지지 못한 나라)에 속한 国家들 이름이다.

자기것을 못가진 国家란 主権行使와 自主性에 制限을 받게 마련이다. 이 制限을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弱少한 国家가 된다. 따라서 強大国의 依存度도 높게 마련이다.

東西(이데올로기的)対立 속에서 弱少国이란 흔히 強大国과 이익을 달리한다. 블럭政治体制에서는 西方에 속해 있지만 経済的 地図에서는 南에 속해 있는 国家가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西方(또는 東方)에 속해 있지만 2次担保 또는 3次 担保物 처럼 市場性도 약하고 쉐어(Share)에 대한 인기도 별로 갖지 못한 国家의 이익이란 그 政治的 目標가 반드시 一定하다. 主権行使에 있어서 自主性이다. 그러나 블럭全体의 이익에서 보면 이는 全面的으로 거부되어야 마땅할 것이 된다. 게다가 経済的 自立度마저 낮을 경우 이 弱少 国家는 第2, 第3의 <宗主国>을 맞이해야 할 版局에 놓인다. 이와 같은 弱少国에 대한 列強政治는 어떻게 構成될 것인가 하는 問題가 본고의 과제인 것이다.

<歴史는 반복한다>

植民地争奪戦에 끼어 자국의 한 몫을 차지 하려고 国家의 中心政治를 경주하였던 18～19世紀의 列強들이 있었다.

약간 変貌되었지만 당시의 強大国들이 즐겨 집행하였던 強大国 協商이란 外交形態가 復活하고 있는 側面을 보는듯 하다는 것이 現代 저널리즘의 表現이다.

이는 확실히 国際政治学 分野에서도 다루고 지나가야 할 장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시의 열강 간의 協商은 어떤 形態의 内容인가?

그 당시의 強大国 政策은 (1) 積極的인 自国利益의 追求, (2) 他強大国에 대한 弱少国利益의 희생 등으로 大別되었다.

이는 19世紀 旧韓末 韓半島에 대한 美国의 政策을 보면 알 수 있다. 中国에 대한 権益保持때문에 日本의 韓国支配를 일방적으로 방치한 歴史的 通例가 있다. 오늘날 美国은 아시아에 대한 아메리칸 프레센스 保持와 太平洋에 대한 政策的 이해관계 때문에 弱少国家의 主権防衛問題는 아랑곳 없이 中共과 協商하고 있다. 그 結果는 아무리 따져도 韓国이나 自由中国 및 其他 東南亜 제국에 유리한 局面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드골의 경우 처럼 자기것을 가졌을 때에는 効果的으로 情勢에 便乗하면 유리한 他局面도 고려될 수 있는 両面性이 存在한다)

어쨌든 強大国의 国家利益 追求는 예나 지금이나 다른바 없다.

우선 아시아政勢의 基本状況을 把握하면서 国際政治上의 列強政策을 읽어 보자.

흔히들 아시아는 世界의 변두리라고 한다. 이 점은 共産主義者들이 만든 戦略地図에서도 共通点을 発見할 수 있다. 즉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프리카란 地域意識을 政治的으로 着色하여 하나의 戦略地図를 만든것이 다름 아닌 共産主義者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 世界의 변두리가 갖는 客観的인 意味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먼저 帝国主義的 評価가 있다.

帝国主義란 現状打破를 생명으로 한다. 資本主義的 膨脹을 아그레시브 한 측면에 중점을 둔 表現이 帝国主義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는 社会帝国主義(註6)라 用語도 생겨나고 있는 터임으로 꼭 資本主義的 膨脹政策만을 帝国主義라고 지적할 수 없게 되었다.

蘇聯의 체코侵入(1967)이후, 이를 가리켜 中共이 蘇聯을 社会帝国主義라고 삿대질 하였는데 基本上 強大国의 一方的 国家利益防衛政策을 통털어 帝国主義라고 규정할 수 있을것 같다.

이 帝国主義的 아시아 評価에는 크게 세갈래가 存在한다.

하나는 자기화 政策을 실현시켜야 하겠다는 적극적인 介入意欲이 前提가 된 후진지역 또는 개발도상 지역이라는 것이고 두번째 評価는 이들 諸地域을 政治戦略上의 真空状態로 간주하고 戦闘的 이데올로기로 武装시켜 기성 勢力에 대한 대립세력으로 육성하므로써 衛星勢力 내지 同調勢力化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의 評価는 古典的인 国際政治学의 범위에서 따내온 이른바 勢力権 형성이 바탕으로 되는 新生地帯란 것이다.

自己化 介入의 구체적 政策形態에 관한 설명은 1945年 8月 15日 이후의 美国의 적극적인 아시아政策에서 읽을 수 있다. 日本에 대한 점령정책, 韓国戦争参戦(1950), 中共封鎖, 대만해협에 美 7艦隊配置, 東南亜 真空(仏軍의 総退却으로 인한)에 대한 補塡 등 광범한 介入政策은 越南戦争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두번째의 帝国主義的 評価는 共産主義 革命의 실현이 可能한 가

장 약한 고리(環)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소위 3A地域이 선택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본보기로 中共의 中間地帯란 対外戦略理論이 있고 蘇聯의 物質的 接近을 통해 설정되는 該当地域国家의 上部構造(国家理念, 경제건설 이론, 法律思想体系 등)의 自己化란 적극정책이 있다.

세째 영국 방식의 변두리政策(勢力圏의 형성 및 유지)은 역시 分離와 支配의 原則的인 코스로 아시아, 아프리카地域의 紛糾를 일삼아 왔는바 과거에는 東洋史発展에 癌的 存在로 불리워 온 터였다.

어쨌든 이들 強大国의 아시政策基盤은 積極的 또는 消極的이라는 차이는 있을 지언정 自己勢力圏形成이란 需要위에서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단지 이 勢力圏이 既成勢力主体의 적극적인 防衛行為가 過剰防衛段階로 移行한다던가 또는 新生勢力主体가 既成勢力圏에 대해 적극적인 浸透 및 현상타파 세력화 되는 과정이 서로 両立될 수 없는 敵対的 成分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변두리는 일방적인 희생과 피해를 甘受해야만 할 기본적인 問題状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변두리>弱少国에 대한 強大国의 정책상 또 하나의 기본상항은 변두리 自体가 갖고 있는 非統一性이다. 이는 集団利益을 가로막는 그리고 스스로의 자주성을 가로 막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는 기왕에 각기 소속돼 있던 세력권의 영향이 独占的으로 扶植해 놓은 対立関係의 소산이다. 심지어 위에서도 본바와 같이 中心政策의 하나로 <分離와 支配>原則을 적용한 強大国의 犯罪的인 歴史도 있다. 따라서 이들 諸従属勢力의 그 成長의 자연스런 帰結로서 자기가 종속하였던 既成勢力의 代弁者 口実을 떠맡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들 自体의 상호대립 관계는 多角的이며 多様한 형태로 발전하여 아주 조그마한 共存部位마저도 용인하려 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버린 것이다.

日本과 中共의 관계 印度와 中共, 印度와 파키스탄, 필립핀과 인도네시아 및 마레지아, 월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한국 등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事情의 국면 하나 하나가 統一指向的인 것이 없는 터이다.

이처럼 各者가 이익의 소극적인 差異를 시인하지 않으면 안되거나 적극적인 적대관계를 내포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는 評価가 아시아的 悲劇의 基本사항으로 되는 것이다.

2. 아시아의 可能性과 강대국政策의 패턴

아시아의 未來에 대한 가능성을 나열하는데 있어, 어두운 側面에 관한 몇가지 요인은 이미 거론하였다. 그것에 부가하여 또 하나의 기본적 상황을 찾아 보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共通性의 欠如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의 土着的 勢力으로 커갈 수 있는 集約된 아시아的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肯定的인 아시아戰略의 不在現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은 西歐의 一部이며 中國은 冷戰構造의 극단적인 설명이며 東南亜의 自覺은 아시아란 非生産性 묘목에 우스꽝스런 混合民主主義를 접해 놓은것 같은 말하자면 土着的인 状況에 생명을 넣은 가치 있는 발전과는 거리가 먼 자각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雑多한 기본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것은 아시아의 自覺形態인 것이다. 맹목적인 既成観念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이데올로기의 발전을 도모하자면, 맨 먼저 共産主義란 单一이데올로기의 戰鬪的 挑戰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 커다란 障壁으로 될때 좌절되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오랜 過渡期를 경과하는 동안 이 자각형태는 상호 공통성을 넓히게 되었고 하나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조직적 연대관계를 指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아시아의 장래에 비록 흐릿하나마 하나의 <可能性>을 주게 됨으로써 앞서 말한 강대국 또는 勢力主義에 바탕을 둔 <아시아적 평가>에 중대한 수정을 촉진케 하는데 어느정도 성공하게 되었다. 영국은 大英聯國의 属邦이었던 新生國에 대해 독립을 주는 대신 그 反対給付로서 신생국을 대영제국 연방속에 비끌어 매어 두려는것 만으로도 하나의 外交的 成果로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미국은 과잉개입으로부터 적정개입으로 政策的 転換을 선언(괌독트린=닉슨 독트린)함으로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권익을 지속하는데 최소한의 損傷만을 測定코저 하고 있다.

소련은 그들의 전통적인 南進政策을 赤化戰略에 결합시켜 오던것을 중공의 강력한 안티·테제에 부딪치자 赤化戰略이란 <直接的인 構造> 대신 共存스타일이 곁든 <아시아集団安保> (브레네즈프·독트린)란 <間接的인 전략형태로 그 얼굴을 바꾸어 덤비고 있다

하나의 예로서 마레이지아의 中立主義가 아직까지는 東南亜의 中立主義思想을 集約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美國, 英國 소련, 中共의 아시아戰略에 가장 近接하게 対応해 갈 수 있는 것으로 내다 보는 전문가의 평가는 의외로 많은 注目을 끌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의 <可能性>에 대해 余地를 남겨두고 이른바 강대국 정책의 패턴을 살펴 보자.

아시아에 대해 기득권을 주장했거나 또는 그 나름데로의 國家利益을 방위할 목적에서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아시아에서의 実質的인 存在(Real Presence)로서의 勢力主体로서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미국, 중공 및 소련을 들어보이는 수가 많다. 최근의 傾向으로 日本의 현실적 존재를 들어 아시아四脚体制를 주장하는 観測者도 많아지고 있다. 勿論 日本의 아시아에서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아시아의 모든 문제에 있어 日本의 발언권을 빼어버릴 순 없는 처지이다. 그러나 日本의 실질적인 의미는 戰略不在의 국가라는데 있다.

日本은 그 자신이, 東条英機가 상징이 되는 軍國体制로 복귀되지

않는 限, 美國의 아시아政策 必役者 구실을 받는게 가장 合理的인 정책 범위가 된다. 日本은 그 자신의 세력권을 가질 수 없는 처지이다. (戰略理論上의 의미) 비록 經済大國으로서 超情報社会 (Supper Industrialized Society)를 건설하는데는 앞장서고 있으나 國家指向이 뚜렷한 指導理念도 없고 확고한 국제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다. 卑近한 예로 69年11月21日付로 발표된 日本首相 左藤와 닉슨美大統領의 共同声明과 그 후의 対中共政策에서의 日本이 보여준 國家路線은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다.

위의 共同声明에서, <韓國의 安全은 日本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것>이라고 말한 다음 台湾地域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全의 유지도 日本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함으로서 옵써버들은 대만과 한국에 대한 <介入宣言>이라고 규정케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71年 中共에 대한 美國의 핑퐁外交가 활발한 展開를 보이자 초조해진 日本은 右往左往 종전의 公約을 통체로 팽게친듯한 政策以前의 추태를 보인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만일 이러한 日本이 과거의 大東亜共栄圏과 같은 帝國主義的 國家目標를 설정하고 그 실천방도로서 軍國主義化 경향을 띠게 된다면 전체 아시아 국가의 전면적인 不信을 초래, 오히려 自由陣営에 불리한 현상을 보편화시킬 공산이 더큰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日本은 크게 보아 영국의 그것처럼 西欧의 一部이며 美國의 必役者로서의 구실 이상의 역할은 할 수 없는 처지인것이고 미국에 대해 일본 자신의 이익을 방위하거나 추구하기 위해 对立的 立場을 가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展望에 속함으로 本稿에서는 아시아에서의 미국, 소련 및 중공의 적극적인 대립관계를 해쳐 보는 이른바

3角関係에 核心을 두고자 한다.

아시아 속에서의 미국, 中共, 소련의 3角関係의 본질은 대립적인 性格을 갖는것이고 그 3角関係를 형성하는 요인으로서는

(1) 이데올로기적인 側面과

(2) 國家利益의 측면 및

(3) 특수 因果関係 즉 3角関係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다.

文化圈의 相異, 歴史意識의 차이, 民族思想의 대립 등에서 由来되는 전체 의식구조(이데올로기)의 대립적 형성은 美國과 中共, 中共과 소련, 美國과 소련 등이 共存共分할 수 있는 共通利益의 기반을 상실케 했다. 가령 소련과 中共은 같은 共産主義國家이면서도 革命戰略理論에서 상반되는 이데올로기적 側面을 보여주고 있다.

中共이 帝國主義와는 不可避한 전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소련은 人類消滅을 招来할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社会主義社会의 실현은 平和移行形態論에 의지해야 합리적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최근의 南美 칠레에 社会主義政権의 발생은 소련側 주장에 유리한 論拠를 제시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 반해 中共은 革命의 最高形態는 폭력으로 政権을 획득하는 것이며, 老衰하기는 했지만 강력한 政権 장악의 수단을 갖고 있는 부르조아지로부터 平和的인 政権移譲을 기대한다는 것은 幻想的 社会主義이며 레닌主義에 대한 중대한 修正이라고 욱박지르면서 暴力至上論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같은 平和共存이란 이데올로적 用語도 소련과 中共의 해석차이는 根本的인 점을 보이고 있다.

소련은 전기 平和移行論原則에 立脚한 소위 <平和競爭>을 통해 결정적인 우위가 명백해질때까지 共存한다는 이른바, <戰術的 次元>의 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平和共存原則은 國際的 視野에서의 階級闘爭戰術로서 인식하는 것이고 周辺國家의 親中共路線의 강요를 의미하는 中共의 <平和5原則>은 敵対社会(美國 등) 支配層까지도 전쟁세력과 平和勢力으로 分断, 戰爭勢力(매파)을 고립시키려는 철저한 戰略的 意味로 채워져 있다. 언제나 약한 고리(環)를 찾아 帝國主義의 急所를 치며 그 局部的 急所들을 연결시켜 致命的 打擊으로 拡大해 나간다는 것이 中共의 中間地帯戰略이며 세계의 農村地帯가 세계의 都市地帯를 포위 섬멸하는 相対抹殺主義인 것이다. (註7)

이와 관련하여 이들 3세력의 南北問題觀을 보자.

약간의 전술적인 차이는 있지만 相互協力体制를 통해, 가진 나라(北)와 못가진 나라(南) 사이의 격차를 平準化 해 보자는것이 미국이나 소련의 제의(비록 表面的인 것일지라도)라고 한다면 中共의 그것은 世界의 後進有色地帯가 잔존해 갈려면 世界의 先進白色地帯를 포위 섬멸해야 된다고 드러내 놓고 주장한다. (註8)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3角的 対立現象은 國家利益의 追求面에서도 3角的 対立関係로 되는 것이다.

둘째 國家利益의 문제이다.

아시아에 있어서 美國, 소련, 中共의 3角関係는 地理上의 関係에서가 아닌 政治上의 의미에 그 핵심이 있다.

3角関係의 本質의 하나는 両者가 接近하려는 것을 제3자가 싫어한다는 점이다. 3者中 両者가 결탁하거나 敵視関係를 옮게 한다면 3者間의 <힘의 均衡>은 깨어진다.

여기서 제1의 국가는 제2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제3국에 접근하게 된다는 公式이 성립된다. 이 공식은 다른 제2, 제3의 국가에 비슷한 노력으로 새로운 균형이 摸索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과정의 動搖에서 파급되는 다양한 효과는 파급이전의 均衡關係의 質量을 전혀 다른것으로 바꾸어 놓는것이 보통이다. 미, 소, 中共間의 3角關係는 이러한 公式的 表現을 도입하여 관찰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의 美國과 소련은,

(1) 모든 自給度가 높은 경제적 超大國으로서

(2) 미국이 中南美, 소련이 東歐에서 유지하고 있는것과 같은 政治的, 경제적, 군사적 연계는 갖고 있지 않다.

(3) 貿易面에서도 미국과 소련의 Share는 다같이 낮은것이다.

(4) 유엔에서의 표밭 구실도 中南美, 東歐에 따를 수 없는것이 아시아의 특징이며

(5) 軍事的으로도 미국이나 소련의 本土安保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주지 못한다.

(6) 그러나 미국은 太平洋國家임을 과시하고, 소련도 아시아국가임을 주장, 다같이 아시아에서의 프레센스를 강력히 내세우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국가이익이 무엇인가?

아시아에서의 美國의 국가이익은 주로 <世界警察國家>, <世界指導國家>로서의 미국의 역할과 결부하여 논의해 온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를 공산주의자들의 표현을 빌어, <世界支配國家>란 개념에서 미국의 이익이 어떤것인가를 분석한다면 어느 정도 상당히 구체적인 윤곽을 그리는데 도움이 된다. 바로 이지배

와 지도의 차이가 미, 소, 中共 3角関係의 対立的 利害関係의 저변을 이루는 원형질이 된다. 그래서 이들 主観的 前提들을 客観化하여 보면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국가이익 유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시아에서의 超大國으로서의 地位를 現状維持한다는 것이다 좋게 말하나 나쁘게 말하나 미국은 太平洋을 미국과 캐너더 사이에 있는 한 개의 호수 정도로 생각한다. 即 방위적인 측면과 공격적인 측면 어느것이든 간섭적이란 의미이다.

다음은 이와같은 아시아에서의 特権的 地位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単一挑戦勢力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된다. 과거 日本은 스스로 도전하여 打倒되었지만 中共은 日本의 前轍을 밟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巨大한 軍事力과 경제력에 의해 봉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좀 특이한 국면으로 되는 터이지만 中共이, 伝統的인 資本主義 文明과 미국의 세계전략에 위협적인 존재로 방치되어 있다고 미국이 인식한다는 점이다. 즉 中共이 西方의 資本主義 文明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성장해 왔다는 점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미국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 미국은 反共指導者나 反共政権에 대해서만 祝福하는 정책을 일관해 온것이 결국은 아시아를 択一型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既得権 상실을 곧 패배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의 國家利益 追求方法은 어떤 것인가?

첫째 아시아 국가로서의 安全保障이 문제된다. 이 문제에 관한 완전한 회답은 아시아 및 太平洋地域에 대한 親蘇 벨트의 構築과 소련影響圏 형성에서 읽을 수 있다.

둘째는 帝政러시아의 南進政策과 아시아 赤化戦略과의 교묘한 결합에서 예상되는 새 協力圈의 획득을 통해 政治 및 경제적인 共栄圈(?)을 구축하려 기도할 것인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1) 아시아集団安保

(2) 西쪽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벵글라대쉬, 印度와 동쪽으로는 시베리아 経由, 日本에 대한 拠点確保, 中央部에는 마레지어, 싱가포, 인도네시아를 발판으로 東南亜에 대해 경제적으로 또는 文化的으로 接近을 시도하고 있다.

세째는 아시아에 대한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두마리 토끼 쫓기> 政策을 벌리고 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左右両政権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어느 局面에서고 조정자 지위를 유지할려는 정책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中共의 國家利益은 어떤 것인가?

國家的 至上課題는 이른바 社会主義的 革命의 완성이고 安全保障面에서의 國家利益追求는 미국이나 소련에 의한 中共 包囲網의 打破를 위해 그 주변에 親中共中立帯(최소한의)를 형성하는데 目標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조건과 나란히 하여 아시아市場의 安全展開를 통해 中共貿易構造의 均衡発展(即 東南亜에서 벌어들인 外貨로 西欧에서 資本財輸入)을 기하는 문제도 중요한 국가 이익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세번째 特殊3角関係이다.

미국과 소련관계는 아시아에 관한 한, 中共과의 그것 보다는 더 尖鋭한 対立関係에 빠져 있다.

우선 이 두나라는 冷戦構造와 共存構造의 両面性을 가지고 있다.

共存的 側面이 강조되는 경우는 미, 소의 핵무기 위협이 쌍방에 절실하게 전달되었을 때와, 미국과 소련의 優位立場이 지속되는데 필요한 諸般措置 등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위 두가지 케이스를 除外하면 冷戰構造속에서 対立하게 된다. 예를 들면 中東에서와 같다. (欧洲에서는 共存), 미국은 中・소対立의 表面化순간부터 中・소和解를 두려워 했다.

미・소接近은 中共의 희생 위에서만이 이룩될 수 있었고(아시아에서), 胡志明死亡을 계기로 나타난바 있었던 中・소和解気運에 제일 심각한 신경을 곤두 세웠던 곳은 워싱톤이었다. 그리고 미국과 中共의 핑퐁외교에 펄쩍 뛴곳은 모스코바 였음을 상기하면 이들 3角関係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매우 흥미 있는 자료가 된다. 中東에서 처럼 中共의 영향력이 비교적 미약할 수 밖에 없는 곳에서는 미・소의 대립정책이 表面化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이 강대한 지역에서는 미・소協調가 비교적 스무드한 것을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월남전쟁은 華南에 中共軍을 묶어두고 견제한 꼴이 되어 中・소國境에 安定이 있었다면 소련에게는 오히려 미국의 越南장글 苦行은 바람직한 사실이 되는 터이다.

만일 미국과 中共関係에서 共存構造가 가능한 것이 있다고 하면 对日, 对소견제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東南亜를 포함한 中共의 本質的인 既得權 처리에는 対立関係만 남게 된다. 역시 소련과 中共関係도 형식적인 이데올로기적 측면만 除去된다면 소련과 中共関係는 철저한 적대관계 만이 남게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강대국 정책의 새 패턴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 脱이데올로기

최근의 時代的 특징을 규정하는 時事用語로서 <脱이데올로기>란 말이 있다. <脱이데올로기> 현상은 강대국의 政策傾向에서 由来되었다.

안으로는 국가이익 추구가 강조되고 밖으로는 協力体制가 지향된 결과로서 発生한 것이다. 극도로 강조된 冷戰体制에서의 政治的 移行形態라고도 말할 수 있다.

<全面戰争이 아니면 緊張緩和의 형태가 冷戰体制의 次期移行形態라 말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 자체가 全面戰争의 直接的인 原因이 될 수 없다는데에 <脱이데올로기>時代의 本質이 있는 것이다. 즉 対話없는 대결에서 対話를 誘導해야 하고 対話 자체가 상호이해를 조성하고 불신을 제거하는데 기여함에 따라 자연히 긴장완화의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긴장완화의 토대가 조직화 되면 無益한 대결에서 보다 실질적인 利益追求에 政策的 方向이 돌려지게 된다.

이러한 側面에서의 열강정책의 새 패턴은 19世紀的 國家利益의 추구열이 復活된 형태라 할 것이다.

나. 平和共存 全面戰争의 회피

冷戰両陣営 両極(美·소)간의 平和무드의 조직적 표현인 緊張緩和의 최고정책 목표는 전면전쟁의 절대적 회피에 있다. 平和共存의 의미는 資本主義体制와 共産主義体制가 전쟁없이 평화롭게 同時存在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局部的 共通性을 확대하여 전면적으로 同時発展하자는 것이다. 이는 相対的 利益에

대한 적극적인 侵害가 있을 수 없다는 뜻도 된다. 따라서 미처 解氷무우드의 政治的 의미를 단속 못했다던가 그 조직적 전개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東西対立体制 속에 있는 弱少國의 이익은 전적으로 존중될 수 없는 것이 된다.

다. 내셔날 프레센스(National Presence)의 과시

전항에서 이미 내셔날 프레센스에 관해 구체적으로 상술한바 있다.

미국의 政治, 경제, 軍事的 이익은 태평양에 대한 支配能力의 과시가 필요하다. 소련의 그것도 印度洋 및 太平洋에 대한 國力의 과시가 아시아國家政策指向에 유리하다.

이와 같은 太平洋勢力과 아시아勢力의 숙명적인 대립관계는 평화공존적 政策指向과 세력균형의 철저한 현상유지 속에서만이 폭발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現状存立의 가능성 속에서 약소국의 自活的 政策進路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註 1) Richard M. Nixon, A Report to the Congress, <U.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quoted in <A New Strategy for Peace>, February 18. 1970

(註 2) Same as above

(註 3) Same as above

(註 4) Same as above

(註 5) 加瀬俊一，国際情勢の 多極化，p 5~6

(註 6) 1967年 체코사태 당시 소련이 武力介入하자 中共의 메스콤은 소련을 社会帝国主義라고 呼称했음.

(註 7) 林彪，<人民戦争的勝利万歳>，1965.9.3. 人民日報

(註 8) 前掲論文

Ⅲ. 韓國의 對蘇 平和外交方案

Ⅲ. 韓國의 對소平和外交 方案

國際政治에서 이른바 <眞正한 同盟도 존재하지 않고 진정한 적대국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과 <自國을 除外한 모든 국가가 仮想의 敵國이다>란 말은 상호 모순되는것 같지만 사실은 同曲異巧에 지나지 않는다.

<脱이데올로기>가 云謂되고 國際的 多極化情勢에 효과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政策的 命題앞에서 볼때 소련과 한국의 관계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가능한 것이다. 歷史的으로 보아 한국과 소련의 관계는 中國(中共)과 소련의 관계 보다 柔然한 것이었다는게 사실이다. 中共과 소련사이는 이데올로기만 제거하면 철저한 적대관계만이 남을 수 있으나 한국과 소련 관계는 이데올로기를 제거한 상태라면 심각한 적대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상대적 의미)는게 일방적인 観点이다.

단지 하나의 문제는 北韓의 현실적인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는데 있다. 소련과 同一体系의 地政學的 可致性과 이데올로기의 同質性을 가진 北韓의 政治的 存在를 한국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政治는 현실이며 現實에 대한 도전은 가능성을 낳게 마련이다.

西獨 브란트의 東方政策은 東獨의 존재를 초월하여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였는가 하면 中共의 표발 구실을 하는 소위 3A地域에 대한 北韓의 政治的 浸透는 사실상 보잘것 없다는게 專門家들의 견해이다.

이와같은 現實을 중시하고 현실속에 존재하는 可能性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國家利益의 幅을 넓혀나가는 것이 현대 국제정치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 소련의 對外政策理論과 可能性

1969年6月 世界共産党會議에서 행한 브레즈네프 書記長은 다음과 같은 연설(아시아部分)을 하였다.

<아시아의 集団安全保障体制라는 課題가 日程에 실려 있다>

브레즈네프의 이 새로운 政策的 構想은 구체적으로 밝혀진바는 없으나 그후의 소련의 新聞論調나 放送論評에 따르면 대개

(1) 中共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와의 善隣關係를 추진하는 協力体制이며

(2) 他國의 간섭이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諸國을 수호하는 체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集団安保構想은 特定國家를 目標로 삼은것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의 이익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의 集団的 努力에 의해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과 이 構想이 政治協力에 限定되지 않으며 各國의 경제협력 科學協力, 文化協力을 포함하여 광범한 내용을 갖는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소련으로서는 소위 平和共存政策 토대 위에 아시안諸國에 대한 政治, 경제, 외교전략의 추진에 따라 協調國, 同調國의 增加를 노려 世界共産革命의 土台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전통적인 南進政策에 아시아赤化戰略을 교묘하게 接木시킨 이론적 구성인 것이다.

가. 아시아集団安保構想

1969年 5月 28日, 소련政府械關紙, 이즈베스챠는, <眞空을 메우자>

(마트비예프 論說委員)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당시 이 文章은 1971年이 되면 英國軍의 東南亞 및 西南亞 철수로 인해 예견되는 眞空狀態를 적극적으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에 존재하는 각종 軍事條約機構는 有名無實하게 된다고 분석하면서 이 일대의 세력은 世界戰略体制中 하나의 眞空地帶로 되는바 소련은 이들 지역의 諸國이 스스로 떠맡고 나오는 集団安全保障制度를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글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美國이나 英國을 대신해여 진출하려는 오스트렐리어, 日本등이 이들 진공지대로 침투하려는 기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이 발표된지 얼마 안되어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國際共産党大會 1967年6月7日 會議에서 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아시아集団安全保障体系를 제의했다.

<事態進展은 아시아集団安全体系에 관한 토의를 日程에 이미 올리게 하였다.>

곧이어 소련外務省은 긴급명령을 발하여 駐美大使, 駐中共大使를 비롯하여 印度, 파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세이론, 라오스, 태국, 버마 日本, 오스트렐리아 등 10餘國家의 使節을 召喚, 情勢報告를 하도록 지시했다. (註1)

前記 마트비예프의 論說을 중심으로 당시 소련의 신문, 잡지에 나타난 아시아政策의 새로운 움직임을 살펴보자

<소련의 아시아 아프리카外交의 基調는

(1) 民族解放運動을 支援하며

(2) 發展途上國과의 協力을 추진하는것>이라고 내세운다. (註2)

이것은 1956年 第20次 党大會 당시 흐르시쵸프가 揭揚한 方針을 브레즈네프 코시긴 팀이 그대로 踏襲하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아시아集団安保構想의 초점은 당시 격화 일로에 있던 中共과 소련의 관계 악화란 측면에서 보면 소련의 표적이 무엇이겠는가를 대충 읽을 수 있다.

첫째 中共과 아시아各國間의 離間工作이다

둘째는 적극적인 자세로 中共을 포위해야 겠다는 점이다. 월맹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 몽고에 대한 協力体制의 강화,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 대한 調整役 등이 이를 입증해 준다.

당시 中共은 文化革命으로 인한 內部混乱 속에서 外交不在의 현상을 들어내고 있을 때였다. 인도네시아, 버마, 네팔, 인도, 세이론 등지에서 中共은 심각한 외교적 디렘머에 빠져 있었다.

中共系勢力의 탄압, 反中共暴動, 國境紛爭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아시아에서의 中共의 세력이 후퇴하는것과 並行하여 소련은 아시아外交를 적극 추진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중점적으로 원조해 온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南亜에서부터 마레이지어 싱가포르, 필리핀 등 東南亜 反共諸國에 이르기까지 政治, 文化的인 接近을 시도해 왔음을 注目할만한 일이었다. 종래에는 東南亜에서의 소련의 연계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非同盟 中立主義路線를 표방한 국가에 限定하였던 터였다.

이와 같은 소련의 새로운 방침은 단순히 經濟的 利益을 추구하기 위한것이 아니었다. 中共을 의식한 政治的 布石이었다. 中共包圍網構築과 동시에 포스트, 월남情勢에 대처하여 美國의 세력圈에 쐐기를 박자는 저의도 함께 번득이고 있음을 본다. 앞으로 예상되었던 美·中共接近에 대비한 先制攻擊의 성격도 부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거꾸로 美·中共接近을 촉진한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 당시(69.2) 미국과 중공의 바르샤바會談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미국과 중공의 접근이 不可避한 현실로 내다 볼 소련의 위구심을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워싱톤은 모스크바와 北京의 사이를 離間, 결국은 極東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北京과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바르샤바會談에서는 베트남問題가 흥정되었을 것으로 간주된다>(註 3)

<로저스 國務長官은 방코크에서 열린 SEATO 理事會에서 美國은 北京과의 관계를改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장 그렇게 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조만간 北京에 接近하려 기도할 것임을 거의 확실하다>(註 4)

이러한 위구심을 바탕으로한 소련의 아시아政策이 바로 <新植民主義로부터 아시아의 民族的 独立을 지켜주기 위해 友好, 同權, 相互원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集団安保体制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은 아시아政策의 기본사항으로서 経済援助中心의 外交攻勢를 전개한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은 소련政府를 최초로 승인한 국가란 점에서 특별한 국가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69年 봄 両國은 外交關係 50周年을 공동으로 축하한 의식을 가진바 있다. 이 나라에 대한 소련의 경제원조는 40件(1969年현재)에 달하고 그중 26件이 수행중에 있다한다(이미 거의 전부 완성하였을 것임) 소련의 협력을 얻어 완성한 (개스油田시설, 파이프·라인에 의해 年間 2,000만불의 外貨를 획득하고 있다.(註5)

또 (가불에 최초의 技術專門學校가 완성되었고 시벨간에 油田開發

질소비료工場 건설에도 소련이 원조했다.(註6)

이밖에 全國各地의 氣象觀測所 건설에 소련과 기술협력 계약을 맺었다. 파키스탄에 대한 소련의 원조는 中共으로부터 파키스탄을 격리해 놓으려는 것과 印度와 파키스탄간의 安定을 유지하려는 두가지 목표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파키스탄은 SEATO와 CENTO의 結節点이 되는 地点으로서 소련은 이 나라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소련의 원조는 軽工業分野에서 廣工業段階로 移行함에 따라 火力發電所 高圧送電線, 放送局, 철교등 건설에 협력(1969. 9. 經濟援助協定), 특히 1968年 가라바그의 製鐵所, 東파키스탄의 루푸르原子力 發電所의 下請調査와 石油 개스地質調査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본다.

印度와 소련은 흐리시쵸프時代부터 관계가 깊다.

印度洋은 戰略的으로 보아 黒海艦隊와 太平洋艦隊를 잇는 要衝이 된다. 68年3月 소련太平洋艦隊가 마드라오스와 봄베이에 寄港한 이래 사실상 이 要衝은 소련側에 가담한 형태가 되었다. 이 사실은 미국의 해군전략면에 충격적인 타격으로 인정되고 있다.

소련의 인도에 대한 원조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年間 250万톤의 비라이製鐵 콤비네이트 同170만톤의 보가로製鐵所는 소련의 원조에 의한 66個 企業中 가장 유명한 곳이다. 이밖에 란치의 重機工場, 도르드 발의 鉱山시설, 갈드발의 重電機械시설, 바라운과 고이야리의 精油工場등 24개 기업체가 이미 가동한지 오래된다. 소련의 경제잡지는 印度를 신흥국가운데 가장 높은 무역상 대국이라고 표시하고 있다.(註7)

이밖에 세이론, 네팔,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소련의 원조

형태도 中共을 의식한 文化, 經濟, 軍事的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마레이지어 싱가포르 타이, 필립핀등 反共的이며 対美依存度가 높은 國家에 대한 소련의 자세는 그들 국가들의 월남전쟁에 대한 対美協力(태국, 필립핀)을 비난하면서도 경제면에서의 접촉에는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태국은 天然고무農産物의 対소輸出을 소련은 유리, 신문用紙 등을 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상은 소련의 対亜政策理論의 하나인 아시아集団安保構想의 實体가 무엇인가 하는 점과 그 構想의 실질적인 推進源이랄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接近方法(소련의 아시아諸國에 대한)의 형태를 알아 보았다.

즉 物質的 接近을 통해 政治的 接近 내지 군사적 연계까지 발전시키자는 것이 이른바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集団安保>体系가 소련이 원하는 형태로 발전하자면

(1) 中共이 고립되어야 하고

(2) 日本이 美國과 대립되거나 최소한 中共과 미국의 和解勢力을 견제하는 형식이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 極東에 있어서 日本, 美國, 中共이 결락하여 이들 3國間에 反소비에트的인 聯帯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것이 소련의 의혹이자 경계심으로 되고 있다. 이 反소 연대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아시아 極東의 諸國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 이 지역에서의 세력 배런스는 대번에 깨어져 소련은 완전히 고립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소련의 사고방식이다(註8)

이와 같은 소련의 우려는 한국의 (비록 가깝지는 않지만) 対소

戰略的 接近의 가능성을 살려줄 수 있는 요인으로 될 것이다.

나. 第3勢力의 承認

이 理論은 平和共存이란 大前提 안에 아시아各國의 民族主義的 力量을 인정하면서 아시아 신흥세력의 非資本主義的 발전을 육성해 간다는 것이다. 이 理論은 平和的 移行形態論의 局部的 導入部分이라 할 수 있다.

1953年8月8日 마렌코프는 그의 연설에서 <東洋에서의 강력한 平和維持에 있어 印度와 같은 大國의 地位가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印度는 朝鮮戰爭을 종결시키기 위한 平化愛好諸國의 노력에 크게 貢獻하였다> (註8) 고 말하면서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隣接諸國과의 관계강화를 중시한다는 요지를 언명했다.

이는 당시 상황으로 보아 한국전쟁 이후의 아시아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소련의 전략이론 이었다. 소련側에서 보면 社會主義陣營 소련, 中共 과 帝國主義陣營 사이에 존재하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遠距離目標를 설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短期政策目標에서 본다면 이들 아시아 저개발 신흥세력이 社會主義發展에 접근하는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것은 여러가지 아시아的 要因과 資本主義勢力의 <간섭>이나 저항에 의해 어려운 터임으로 우선 이들을 非資本主義, 非同盟勢力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소련의 국가이익에 합치된다는 이른바 長期政策判斷의 소산인 것이다.

그후의 소련政策을 보면 훌륭히 立證되는것이 있다. 印度에 대

한 강력한 支援은 中共과 印度의 국경충돌에서 조차 소련은 印度편에 서서 조정하였음을 보았고 파기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소련의 不斷한 지원을 괄목한 바가 있다.

이들 非同盟親소國家를 소련은 平和愛好國家라고 불렀다. 이들 세력에 대한 소련의 전략적 평가를 흐르시쵸프의 報告에서 인용해 본다.

<平和의 세력은 諸블럭에의 不參加를 自國의 対外政策原則으로서 선언한 一群의 平和愛好國家들이 欧洲와 아시아에서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 그결과 국제무대에는 구주와 아시아의 社會主義 및 非社會主義의 平和愛好諸國을 포괄하는 광범한 《平和地域》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은 것의 15億의 人口 즉 地球人口의 大部分이 살고 있는 광대한 영역을 점하게 된것이다>(註9)

그러니까 이들 <제3세력>에 대한 소련의 政策은 이들의 國家的 成長이 소련에 対立的 性向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名目上에 理論이지 <아시아集団安保構想>이나 <제3세력의 承認>에서나 모두가 소련國家利益의 최대한의 추구라는데 共通的으로 一致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既存利益을 지키기 위해서는 理念도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는게 솔직한 소련의 立場이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는 左右両政權과 正常的인 관계를 갖는 이른바 <두마리의 토끼 쫓기>로 어느 국면에서든지 調整役의 地位를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소련의 政策的 立場은 한국의 対소接近 政策樹立에 있어 유리한 局面으로되는 동시에 불리한 局面으로도 작용함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2. 소련의 對韓關心度 測定

韓国이 対蘇接近政策을 구체화 시키자면 먼저 韓国에 対한 蘇聯의 関心度를 正確히 읽어야 한다. 中.蘇 対立의 절정기에 北韓은 親蘇에서 親中共路線으로 逆轉, 再逆轉하는 갈등을 보였을 때, 蘇聯은 韓国에 대한 <조용한 接近>을 東南亜外交官을 通해 시도한바 있다. 그러나 自体力量의 미숙과 소련의 진정한 政策的 수요를 헤아리지 못한 韓国政府의 時間選擇의 不一致로 前記 소련의 外交的 시도는 유산되고 말았다는 믿을 만한 報道가 있었다. (1966年 버마에서)

당시 情勢로 보아 소련의 対韓接触은 政策的 需要로 될만 하였다. 그러나 現情勢는 当時보다 더 한층 구체적인 關係再定立을 要求하고 있다 하겠다.

미국은 비록 닉슨 독트린에 의해 아시아에 대한 介入의 한계성을 設定하고는 있으나 소련의 아시아 集団安保構想에는 正面으로 反対하고 있다.(註10) 오히려 最終的인 太平洋 守護役으로 自處하고 있다.

말하자면 닉슨 독트린이 아시아로 부터 군사적 철수를 서사하고는 있으나 미국이 <太平洋国家>임을 否定하고 하와이나 켈리포니아 沿岸까지 後退한다는 <新몬노독트린>은 절대 아니다. 단지 과잉介入 (Over Commitment)에서 적정 介入으로 수정하여, 經済的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보다 合理的이며 効果的인 形態로 아시아 프레센스를 維持하려는 것이다. 이런 点에서는 아시아 또는 極東에서의 어떤 강대국(비록 소련이 아닐지라도)의 독점적 단일 勢力의 対美挑戦은 용납되지 않는다. 과거 日本이 단일 挑戦勢力으로 美国에 対抗하여 自滅되었고 中共이(비록 直接的인 挑戦 形態를 取하지는 않았으나) 대두되자, 美国은 이를 봉쇄, 政治, 經済, 軍事的으로 분단, 아시아 및

世界로 부터 고립시켰음은 잘 아는 現實이다.

그러나 소련의 太平洋 進出, 日本의 재대두등, 새로운 아시아의 均衡政策이 不可避하게 되자 美国은 中共의 포위망을 풀어 견제세력으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勿論 그 限界性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아시아情勢에 關한 正確한 分析과 強大国의 아시아 利害關係를 客觀的으로 網羅, 그 交叉点 사이를 無害航行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韓国의 当面 外交課題가 되는 것이다.

이미 論及된 소련의 対韓半島政策에서 떠나 最近의 韓国情勢에 対한 蘇聯의 反應을 測定해 보기로 한다.

1972年 1月 18日字 蘇聯共産党 機關紙 푸라우다紙는 韓国 統一方案에 言及하면서, 〈統一問題는 外勢의 干涉에 依해서가 아니라 韓国人 自身에 依하여 그리고 戦争의 方法이 아니라 平和的인 方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強調했다 한다.(註 11)

또한 同紙는 〈全民族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進行되고 있는 南北赤十字 団体들 사이의 会談을 성사시키는 것을 한국의 平和的 統一의 有利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 이라고 言及했다 한다.(註 12)

여기서 注目할만 한 대목은 〈外勢排除〉란 傳統的 주장과 〈平和的 統一方法〉의 모색으로서 南北赤十字会談의 成事라고 주장한 点이다. 南韓에 美軍 기지가 存在하는 한 蘇聯과의 적극적인 接近은 지난한 問題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南北赤十字 団体들의 会談이 〈韓国의 平和的 統一에 有利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리라는 관점은 韓半島에서의 現狀이외의 적극적인 政治的 시도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내심을 말해주는 케이스가 된다.

72年 7月 4日 南北共同声明이 發表된 後 모스크바에 있는 日本 新聞 特派員의 기사를 보면, 南北接触에 關한 蘇聯의 関心度를 점칠 수 있다. (註13)

<南北韓의 7.4 共同声明을 맞이한 크레므린은 韓半島에서 再次 戰争을 하지 않는다는 서울~平壤提議는 双手로 환영하고 있음에도 달갑지 않게 여기는 点은 東西獨과는 달리 南北 平和統一 關係가 어떻게 具体的으로 進行되고 있는가에 対한 전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며,

李厚洛中央情報部長과 朴成喆 第2副首相의 相互訪問에 關해 金日成政權이 蘇聯과 中共에게 事前協議가 없었다는 데에도 근거가 있다.

蘇聯은 戰争으로 피를 흘린 南北韓의 지난 4半世紀 關係를 生覺할 때 南北調節委가 생긴것 만으로 어떤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時期尙早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報告와 아울러 소련은 南北韓의 合作形態를 朴正熙大統領과 金日成首相 体制로 될 것이란 可能性에 무리를 두지 않은 듯한 스케치도 傳했다.

이 보다 앞선 6月 15日字 모스크바 放送은 南北統一方案 實現의 첫 조처로서 南北間의 平和条約을 締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現在의 社会制度를 그대로 두고 <조선의 연방제>를 樹立할 것을 促求했다. (註14)

어쨌던 소련의 対韓論評은 <現狀維持>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外勢排除이란 軍事的 要因을 제거하기 위한 口号이며, 平和協定이란 韓半島에 対한 政治的 緊張緩和를 노리는 것으로서 이는 소련의

發言權 強化를 誘導하는 것이다. 軍事的 緊張緩和는 中共에게 유리한 問題이지만 政治的 緊張緩和는 소련에게 直接的인 關係가 있다. 印度半島問題 해결에서 처럼 소련의 역할이 增大되기 때문이다.

타스通信에 依하면 外勢 배제와 美国의 南韓주둔에 초점을 두고 韓国情勢를 비판한 最近論調가 소개되고 있다.(註 15)

위의 反應에서 蘇聯의 対韓關心度는,

(1) 아시아, 極東諸地域에서의 勢力均衡이 파괴되지 않는 範圍에서의 南北韓協商을 期待하며,

(2) 韓国에 關한 한 미군의 주둔이 問題狀況으로 되며 이는 対韓政策에 있어 轉轍機 구실을 한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따라서 韓国의 対蘇接近의 限界는 극동에서의 緊張緩和, 現狀維持에 기여도에 있으며 勢力均衡에 重大한 손상이 가는 조처는 여타 강대국 立場을 고려하여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点이다.

그리고 韓国에서의 美軍의 주둔, 또는 군사기지가 存在하는 限, 韓国의 対蘇接近을 위한 적극정책은 空轉될 可能性이 커다는 事實에 유의해야 될 것 같다.

3. 韓國의 対蘇認識

그러면 韓国의 対蘇認識은 어느 水準에 到達하고 있는가?

지난 5月6日 金溶植 外務長官은, <蘇聯이나 中共과 可能하면 通商을 通해 關係를 개선하는 것이 政府의 基本立場>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어느 나라와도 平和的인 方法으로 關係 개선을 希望하고 있다>고 밝혔다.(註16) 이는 뒤에 마닐라에서 한 발언과 같은 내용이다.

金鍾泌 国務總理도 기회 있을 때 마다 中共 및 蘇聯과의 關係 개선을 国会에서 證言한바 있었다.

이것은 韓国外交의 自主性을 과시하는 것도 되겠지만, 国際的 緊張緩和 추세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自救策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인접한 中共과도 이미 大陸棚 問題로 비록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이지만 対話를 건네고 있는 터이다.(註17)

한국政府가 東亜關係改善에 着眼한지는 이미 꾀 오래 된다.

1970年에 이미 東欧와의 部分的인 貿易去來에 實績을 쌓았고, <非敵性 国家와의 關係 改善을 위한> 문호 개방을 宣言했던 터였다. 지금 당장 中共, 또는 蘇聯과 關係 改善에 關한 협상을 始作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라운 일로 받아드려지지 않는다. 다만 韓国의 固有한 立場과 시기의 부적절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고려 등으로 인한 약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 소련을 비록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보는 터이지만 革命 50周年을 넘어선 강대한 現代的 行政体系와 理念的 社会建設을 完成한 기능화된 近代国家로 認識하는 것이다. 사회체제가 기능화 되어 發達하는 境遇 先進的 思考의 自由로운 通行이 가능하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은 革命初期의 주한 狀況에서 주변 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수출을 통해 同調벨트를 구축하는 데서 보다 자연스런 対外政策에서 国家的 實益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다.

아직 원시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된체 戰闘的 理論으로 일관하고 있는 北韓과도 이미 協商을 시도하고 있는 터에 한국이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 착수했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게 없다. 다만 소련의 対韓政策이 具体的으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또 하나,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능동적 姿勢에 의한 中共과의 關係改善이 日本의 態度 여하에 따라 소련과 日本, 또는 소련과 中共關係의 好轉이 예상될 수도 있다는 이른바 〈逆轉, 再逆轉〉 可能性에 대한 대책의 결여가 주는 우려를 받아 드려야 한다는 데서 적극적인 政策技術이 억제 당하고 있다.

4. 対소接近의 패턴

패턴(가) 東·西 関係改善

우선 戦後 東·西接近의 패턴을 살펴본다.

대개 3가지의 類型으로 대별된다.

첫째 中共과 日本처럼 文化的 側面으로부터 接触하여 경제적인 교류의 폭을 넓혀 政治的인 관계개선책을 말한다. 이를 <政経分離> 方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多段階 접촉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블럭체제의 강력한 감시를 피하기 위한 奸巧한 対外政策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両 対象国은 文化的, 社会的 側面에서 共通需要를 찾아야 한다. 政治負担이 없는 대신 경제적, 평화적 관심이 높은 政策基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中共과 日本은 경제적 共通需要에서 시작하여 정치적으로 移行한 좋은 標本이다.

둘째는 政治的 수요에서 출발하여 一挙에 正常関係로 突入하는 패턴이 있다. 미국이 1970年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핑퐁外交에서 일거에 中共과 巨頭接触을 통해 관계 정상화로 들어갔다. 물론 오랜 기간의 바르샤바 大使級会談으로 両国間의 이해가 깊어진 것이 바탕이 되어있긴 하지만 이 경우, 미국과 중공은 아시아 정세에서 공통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눈을 돌린데서 이루어진 성과였다고 할 것이다.

세째는 상대방과의 공통적 수요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일방적 수요를 충족해줌으로서 이루어지는 관계 정상화 방안이다.

이 일방적 양보를 통해 얻어지는 반대급부는 국가적 지위 향상과 주변세력에 대한 자주성 확립이다.

브란트가 東方政策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먼저 NATO의 현상유지를 美国에 강력히 요구하고, 西獨의 再軍備에 신경과민에 빠져있는 소련에 대해 武力不行使宣言을 하면서 不可侵条約을 체결한 것은 소련의 一方的 要求를 무조건 수락한 꼴이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소련, 東欧에 대한 西獨의 무력불행사 선언 교환과 국교정상화 교섭은 東獨으로 하여금 고립케 하여 마침내는 東獨으로 하여금 西獨의 東方政策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음은 西獨의 国家的 地位向上에 푸러스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東·西間의 基本的인 접근 패턴 속에 한국과 소련을 넣어보자.

소련의 아시아安保面에서의 한국은 政策的 需要部位에서 上位를 차지할 수 있다. 美国과 中共이 소련과 日本의 팽창을 견제하려 한다고 보는 것이 소련측 입장이라고 한다면, 소련은 우선 日本과 접근하는 것이 순서이고, 日本과 깊은 유대관계에 있는 韓国과 가능한 한의 관계개선은 매우 필요한 사항이 된다. 그러나 소련은 한국에 관한 한 좀 더 観望的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71年 南北赤十字会談에 즈음하여 이미 取材를 위한 소련記者의 入国에 대해 문호를 개방한 바 있으며, 73年度 朴大統領의 年頭記者会見에서도 <비록 체제와 理念을 달리하는 共産国家일지라도 우리에게 敵対行為를 하지 않는限, 協力을 拡大해 나갈 것이라고 闡明한 바 있다. 이러한 일연의 조처를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으로서는 하등의 대응 조치가 없었다. 다만 呼称問題에서 서울政権, 南韓(South Korea)이란 수정이 있었을 뿐이다.

이는 中共関係에서 본다면 한국에 접근하는 것이 긴급한 政策需要가 될지 모르나 北韓의 존재를 의식한 나머지 한국에 대한 성급한 반응은 삼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일 北韓이 中共에 偏重되게 행동하게 될 경우, 소련은 한국에 대해 좀 더 적극성을 띠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 쪽에서 先制的 提議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은 첫째 類型에서 보이는 상호 文化的, 社会的 문제로서 人道的 課題를 들고 나갈 수 있다. 사할린僑胞問題, 어업관계 및 해상사고 상호구제問題에 관한 협상을 제의한 후 점차 그 폭을 넓혀 소련여객 수송 및 상업목적을 가진 선박의 영내 무해통과 및 기항 허용 등을 통해 経済的인데서 政治的인 것으로 관계개선을 기도할 수 있다.

둘째 公式을 적용한다면 한국은 政治的 필요 — 미군의 철수, 北韓의 中共밀착, 北韓, 日本의 등거리外交의 실현에서 오는 불안의 감소를 위해 — 를 적정하게 활용, 소련과 대번에 관계개선을 위한 접촉을 개시할 수 있다.

세째 公式을 도입한다면 한국은 남북적십자 사업을 벌리는 일방, 中共, 소련등 주변국가에게 무력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하는 일방 몇가지 外交原則을 받아드려 한국의 입장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은 理念的으로 융통성을 과시, 새로운 수용태세를 확립해 가야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소련의 정책 수요를 받아드리면서 그것과 相比되는 반대급부를 가려잡아야 하는 것인바 상세한 것은 후술에서 하기로 한다.

패턴(나) 原則의 선언 商業的 中立主義

우선 소련은 社会主義国家라는데 착안해야 된다. 체제가 상이한 국가에 대한 소련의 정책성향은 의혹과 철저한 不信의 바당위에 서 있다.

상대가 공산주의국가인 경우, 그들은 力量相互関係에 대해 매우 민감한 理論的 가치를 부여한다.

共産主義者가 基本的인 政策을 결정하는 경우, —— 党의 綱領이란 형태를 가지나 먼저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소위 <時代認識> 即 우리들 표현에 따르면 情勢判断인 것이다. 이 정세판단의 中心이 되는 것이, 현 시점에 있어서의 革命勢力과 反革命勢力, 共産主義와 資本主義의 力量関係의 評價라는 것은 레닌以後에 일관해온 不変의 사실이다.

힘의 関係가 분명해지면 —— 절대 우위 —— 공산주의자는 체면도, 원칙도, 条約이나 国際的 輿論 또는 信義같은 것은 헌신짝 버리듯하고, 侵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 정세판단에 있어 불명확한 경우 — 절대우위가 아닌 경우 — 역시 모든 수단을 동원 휴전 또는 平和를 선택할 능력을 가진 것이 공산주의자들이다.

흐르시쵸프가 체면 불구하고 쿠바로 부터 미사일을 철거한 사실이 適例가 될 것이다. 옛날 스타린이 그리스의 빨지산을 팽개친 것은 地中海의 制海権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를 궁지로 모는 경우 필경에는 美国과 英国의 挑戦을 招来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때문에 였던 것이다. 일종의 모험주의적 경향을 경계한 조처라 하겠다.

가까운 예로 소련의 <체코介入>은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뒤엎고 행해졌다. 전문가들은 국제여론의 반발, 국제공산주의 분열의

가능성, 平和共存이나 긴장완화에 반한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전문가들은 개입을 예견한 바 있다. 그들은 소련이 체코에 介入해도 체코人民은 無抵抗이며, 미국은 対抗措置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불란서와 서독은 합치된 국론이 없는데도 左翼学生乱動에 불란서가 꼼짝 못하고 있을 때였음을 상기한 것이다.

요컨데 공산국과의 平和外交는 강력한 武力에 의한 억지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으로 된다하겠다.

이러한 처지에서 우리나라가 소련과의 平和外交를 전개하려면 美軍의 주둔문제가 절대 기피요인인것 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 절대 必要要件이 되는 국면도 갖고 있다. 이 강력한 억지력을 平和外交에 배경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이 강력한 억지력은 平和守護내지 방위적인 역할에만 국한한다는 보장을 원칙으로 선언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

가령 西独의 <武力不行使宣言>과 比肩되는 平和原則의 선언을 미리 研究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하나 西欧는 平和共存이 定着한 상태에서 現状固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平和共存 조차 定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対소接近을 위한 平和外交 전개는 실질적인 国家指向의 側面에서 많은 課題를 갖고 있다.

무엇 보다도 자체 역량에 대한 再編이다. 미국이나 日本에 대한 의존도를 平和的인 内容으로 전환하면서 강력한 反共国家란 이미지를 脱皮해야 한다. 脱皮하는 방도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기본적인 것은 한국의 北方政策이 平和共存이라는 大前提에서 출발한 것이며, 동국에는 現状固着에 절대적 寄与度를 가진것이란 사실을 밑

게 하는 현실外交의 실천을 內外에 선언해야 할 것이다. — 이것은 平和外交를 달성하는 기본원칙이 된다.

또 하나 원칙은 反共이란 상징적 이미지를 민족국가 번영과 평화적 발전 정책으로 구체적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즉 뒤집어 말하면 민족국가 건설을 파괴하고 경제건설과 자주성을 해치는 세력에 대한 방위수단 — 抑止力으로서의 力量関係는 강조되어야 하지만 相对抹殺主義의 도구로서의 反共主義는 아니란 점을 보여야 한다. 에집트나 마레지어 같은 국가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억제하고 때로는 공산주의자들을 대량 투옥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 자체가 소련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파괴적 활동의 성격을 요해하기 때문이며 민족국가 권력의 性向을 이해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筆者는 한국의 対소(対外一般) 平和外交 展開를 위한 원칙의 하나로 商業的 中立主義(Commer - Neutralism)을 제창하는 바이다.

상업적 지향성이 있는 정책적 사항이라면 어느때, 어느국가를 막론하고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원칙이 상업적 중립주의의 表皮가 된다. 우리는 이미 東欧와의 무역관계도 부분적이지만 갖고 있다.

기타 非同盟中立主義와도 적극적인 국가관계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실천하는 방도로서 ASPAC과 같은 극부적 이념추구에서 과감하게 方向転換을 시도하면서 ASEAN 같은 기구에 자진하여 뛰어들어가야 한다. ASEAN이 제창하는 東南亜中立帯論도 필요시에는 수용할수도 있는 태세를 보여야 한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領海内에 自由港을 설치할 수 있으며, 内陸에 共産国家의 수송기 여객기의 기착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ASPAC, SEATD에 대한 先制的 理念改造에 착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政治的 불럭에 대한 不參加를 선언해서는 안된다. 어디까지나 政治軍事的 座標는 西方에 소속해야만 하는 것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적 본질을 보호하는 方便이 되기 때문이다.

거듭 논의되는 것이지만 국제정세는 質量両側面에서 항상 가변적인 것이다. 우리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에 앞서 自体力量에 대한 재점검 작업이 있어야 하고, 진정한 우방과의 관계 및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손상하지 않으려는 1次的 努力이 先行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패턴(다) 時期와 方法

對소平和外交의 전개 시기를 말한다. 韓半島의 긴장완화는 소련정책의 절대적인 수요가 된다. 美国, 日本, 中共에 대한 세력 균형 유지에 한반도가 차지하는 比重이라는 상당한 것이다.

그러나 소련으로서는 北韓을 제치놓고 한국과 접근해야만 하겠다는 절실한 전략적 가치는 부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 먼저 對소平和外交의 原則만 선언하는 원칙적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 文化, 經濟的 接近에서 실리추구의 목적이 달성되면 한반도 平和統一에 소련의 영향력을 도입해 보는 실험적 단계가 뒤를 잇게 되면 곧 관계정상화란 정치적 단계로 골인하는 多段階接近方法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한국은 中·소 對立을 활용해서도 안되지만 무력하게 방치해도 되지 않는다. 초연한 국가 자세에서 平和外交를 전개해야 한다.

中共과의 대륙붕 협상 제의가 오고 가는 경우, 소련과의 해상구제 협의가 거래될 수 있다. 남북적십자 협상의 진전에 따라 사할린 교포문제로 우회적 접근을 이룰수도 있다.

日本과 소련, 日本과 中共, 美国과 中共이 태평양 세력균형의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접촉을 개시하는때, 우리가 가만히 수수방관한다는 정책을 현명치 못한 것이다. 그 적절한 시기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패턴(라) 수단의 선택

對소接近의 수단으로서는 非政治的인 標榜이 앞서야 하는 文化, 社会的 分野를 선택할 수 있다.

소련政權을 최초로 승인한 아프카니스탄을 통하여 광범한 접촉을 벌려도 좋고, 인도와 같은 나라와 적극적인 관계 — 外交関係 수립 — 를 벌려 간접적인 관계심화를 기해도 좋다. 국제기구의 총본산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 같은 나라가 仲裁役을 맡는다는 것은 당면 긴급한 과제가 있을 때 주효하다. 가령 어민 보호요청이라던가

또 소련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마례지아를 매개로 각 3각교역관계를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론되어야 할 것은 北韓에 대한 孤立政策의 활용이다. 金日成政權이 주장하는 平和的 통일방안과 聯邦政府論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타격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의 국제정치적 필요성을 대담하게 개진함으로서 소련의 <제네바会議> 스타일의 발언권을 인정해주는 형식을 취한다면 아마도 北韓과 소련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있는 여지를 잃을 公算이 커진다.

우리가 선택하는 수단에 따라 한국의 안전보장의 기반은 굳어질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솔직한 표현을 빌린다면 소련과의 接近은 北韓의 相対的인 약화를 노리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한국의 안전보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놀것이라는데 착안한 정책이라는데 목적을 둘 수 있는 것이다.

(註 1)　中国大陸問題研究所：中共動態分析<莫斯科亜洲政策的　新構想>
1969.7.25

(註 2)　1966.4　소련共産党　第22次党大会

(註 3)　国際生活 (소련)　1965.5

(註 4)　新時代 (소련)　1965.5.30

(註 5)　Mosow News,　1969. NO. 9.

(註 6)　外国貿易註 (소련)　1969. NO. 5

(註 7)　世界週報　1969.7.1.

(註 8)　11PaⅡa, 9, aBIyCTa , 1953

(註 9)　XX cЪe3A KIJeC, TOM I. CTP, 22.

(註 10)　1969.7.24　닉슨은　亜洲各国巡訪길에　오르면서　괌도에서 記者会見을　가진후　귀국하자　말자　白堊舘에서　両党指導者를　招致, 미국의　아시아政策에　관해　설명하면서　<미국은　어떤　강대국 (소련이　아닐지라도) 과도　아시아집단안보　조치에　공동참가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註 11)　1972.1.28. <조선중앙통신>인용

(註 12)　同　上

(註 13)　72.8.15　毎日新聞　吉岡모스크바　특파원　発

(註 14)　南北赤十字会談日日綜合報告　第265号, 1972.6.17

(註 15)　73.4.24　<조선중앙통신>　인용보도, 쟈르베슨誌　最近号

(註 16)　東亜日報　73.5.7

73.4.2 駐유엔　中共代表　沈арт良의　海底探査 4原則宣言과 日 4月9日字　한국政府의　협상용의　발표 (外務部) 및　周恩来의　南北韓　日本　등과의　협상　고려　언명 (카나다資源相.) 맥드날드伝言) 등　東亜日報　73.5.7